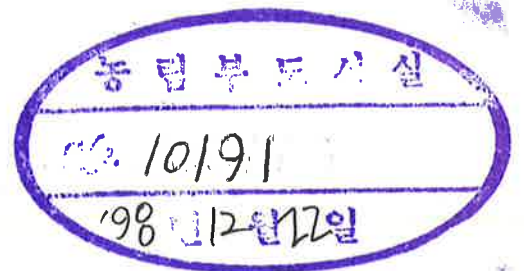


행정간행물등록번호
31000-51110-5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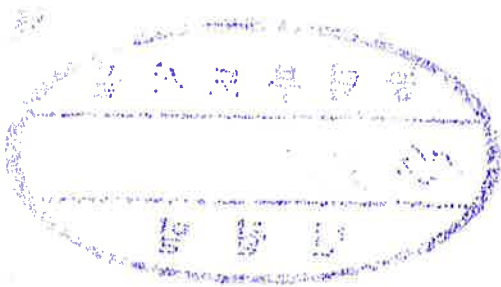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98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1998. 12



대한민국정부

본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 시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음.





목 차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3
1. 목표 및 방향	3
2. 재원확보 및 투융자계획	6
3. 구조조정 추진성과('94~'97) 및 평가	13
II. 주요 농정제도의 개혁	15
1. 농정추진 조직의 개혁	15
2. 협동조합의 개혁	18
3.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21
4. 투융자제도의 개혁	30
5. 「열린농정」 적극 추진	34
III. 행정규제 개혁 및 농가경영 안정대책	36
1. 농림수산 행정규제의 개혁	36
2. 농가경영 안정대책의 추진	38
3. 사료곡물과 영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39
IV.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44
1. 경쟁력 있는 경영주체의 육성	44

2. 생산기반정비 및 농업의 기계화·현대화	50
3. 농림어업의 첨단산업화 및 정보화 촉진	61
4.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대책	68
5. 친환경농업 육성	76
V. 품목별 경쟁력 강화시책	81
1. 쌀 산 업	81
2. 원예산업	84
3. 축 산 업	87
4. 임 업	96
5. 수 산 업	105
VI.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시책	109
1. 다양한 소득원 개발	110
2. 기초생활환경 개선	112
3. 교육여건 개선	117
4. 농어업인 연금제도 실시	120
5. 의료여건개선	122
6. 귀농인력증가 및 귀농대책	125
7. 귀어인력증가 및 귀어대책	127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 목표 및 방향

UR 타결 이후 지난해까지 농정추진상황을 돌이켜 보면, 농업부문에 적지 않은 투자가 있었고,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으나, 많은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특히 첨단시설과 규모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해외원자재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IMF 위기앞에 커다란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규모화에 상응한 농업인들의 기술·경영능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일부 부적격한 사업대상자의 선정, 농가의 경험미숙,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사업이 부실화되고 농촌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1998년도 농정의 여건은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개방화와 지난해 말 발생한 IMF 외환위기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방화에 따라 국내의 농산물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경쟁이 더욱 심화되었고, IMF 외환위기로 인해 농업생산력측면에서는 비용이 상승하고 농산물 수요측면에서는 소비가 위축되었다.

한편, 엘니뇨 등 기상이변과 중국의 식량수입국으로의 전환, 그리고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의 심화 등 세계적인 식량수급 불안요인은 점증하고 있어 주곡자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환율상승에 따라 농산물수출의 가격경쟁조건이 호전되었고, IMF사태이후 증가하고 있는 귀농인구는 농촌임금을 안정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농정여건의 변화와 그간의 농정추진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IMF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한편,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농업이 적절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98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였다. 올해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중요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WTO체제 출범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하여 전문농업기술을 담당할 수 있는 전업농·법인경영체 등 농림어업 전문경영체를 적극 육성하고, 이들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경영·기술 컨설팅 등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정비와 기계화·시설현대화를 통하여 농업생산성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농림수산기술개발과 농업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최근의 유통여건변화에 대응,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제도개선, 물류 효율화, 직거래 활성화, 가공산업의 효율적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WTO체제 출범으로 개방된 세계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하여 국내수출산업 기반구축, 해외 농산물 시장개척 등 수출진흥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접근물량관리, 원산지표시제실시, 동식물 검역기능강화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대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최근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국내적으로 우리 농촌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국토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공급을 위하여 환경농업육성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곱째, 농어촌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료 등 복지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개발하여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품목별로는 우선 쌀 산업은 '96년 수립된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안한 세계식량사정과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쌀자급기반의 확충과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4년까지 벼 재배면적 92만ha 확보, 농지보전시책 강화, 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 실시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예산업은 주산단지의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기계화·시설자동화를 통한 규모화된 전업적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축산업은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형 축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2001년 수입개방에 대비한 한우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임업은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등 산지의 자원화와 산림의 환경기능 강화, 그리고 1·2·3차 산업이 공존하는 산업공간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업은 어장정화 및 어선감축, 어선의 현대화로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고소득 양식품종 및 양식기술의 개발보급으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산업협동조합의 개혁과 수산물 유통구조개혁을 통하여 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선진수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정책방향하에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재원확보 및 투융자계획

가. '98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98년도 농림분야 예산은 그동안의 농림사업 점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쌀자급기반의 확충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당초의 투자규모는 42조 투융자계획과 15조 농특세 투자계획의 소요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도록 반영하였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로 경기후퇴와 세수부진이 전망됨에 따라 농림부문 예산도 삭감 조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신규 대규모투자는 최대한 억제한 반면,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유통개선, 환경농업육성 등의 분야는 예산배정에서 특별고려를 하였다.

나. 농어촌구조조정사업 예산규모

42조 농어촌 구조개선 및 15조 농특세 투자사업 예산을 모두 합친 '98년 농어촌구조조정사업 예산 총규모는 7조 9,276억원으로 '97년 예산대비 3.3%가 줄어들었다.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규모는 6조 6,614억원으로 '97년 예산대비 0.6%가 감소하였으며, 추경예산편성으로 당초 투자계획 대비 1조 1,476억원이 감액되었다. 15조 농어촌특별세 사업 예산은 세수부족으로 1조 2,662억원 규모(채무상환 269억원 제외)로 편성하였다.

< '98년 42조 구조개선 및 15조 농특세사업 예산규모 >

- 42조 구조개선예산 : ('97) 6조 7,013 → ('98) 6조 6,614억원, 0.6% 감
- 15조 농특세사업예산 : ('97) 1조 5,900 → ('98) 1조 2,662억원, 20.4% 감

다. 농어촌구조조정사업 중점 투자분야 및 재원확보 내용

(1)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42조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사업 예산은 생산기반정비 등 우리농업의 구조개선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 7조 8,090억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IMF 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시 일부사업을 축소하여 6조 6,614억원을 반영하였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기계화에 필수적인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정비사업과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은 '97년 예산대비 2.4% 늘어난 2조 1,901억원을 확보하였다.

농업기계화는 농기계 반값공급(보조)에 따른 과잉수요억제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을 폐지하여 용자로 전환하였고,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등 농기계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97년 대비 19.0%가 감소한 3,661억원을 반영하였다.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정예 농업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7년 보다 4.9% 증가한 4,683억원을 반영하여 후계자 8천명, 쌀전업농 6천명, 과수 및 화훼 등 전업농 1,300호를 육성하게 된다.

도매시장, 공판장 등 유통부문예산은 집행가능성과 사업진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검역예산 및 환경관련 예산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증액하였으나, 전체 유통예산은 4,320억원으로 '97년 보다 4.9%가 줄어들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관련 사업비는 '97년 대비 2.3%가 줄어든 1,999억원을 반영하고, 시설현대화는 '97년 대비

4.1%가 늘어난 3,253억원, 축산업구조개선은 '97년대비 0.7%가 줄어든 6,876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IMF 관리체제에 따른 경영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자금은 각각 '97년 대비 5,000억원, 1,500억원을 증액한 3조 8,000억원, 6,700억원 규모로 운용토록 하였다.

어업과 임업부문의 구조개선사업 예산중 어업부문은 '97년 예산대비 0.6% 증액된 4,742억원을 확보하였고, 임업부문은 '97년 예산보다 4.9% 감액된 4,107억원을 확보하였다.

한편, 농어촌 부문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기계 구입지원 등 일부 과잉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농업인 보조사업은 보조를 축소하고 용자로 전환하였으며,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여 농업인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2) 15조 농특세 사업예산

15조 농특세 투융자사업 예산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농촌생활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향상이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하였으나, 농특세 세수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

'98년 농특세 총예산 1조 2,931억원중 경지정리, 유통구조개선, 기술개발 등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예산은 7,595억원으로 58.7% 수준이며, 또 농촌도로·하수도정비·주택개량·생활용수개발 등의 농촌생활여건 개선 예산과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의료서비스·학자금융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예산은 5,067억원으로 39.2%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농특세 세수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국채관리기금에서 일부 차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98년에는 1,723억 원을 차입하였고, 이에 따른 채무상환 예산 269억 원도 반영하였다.

라. '99년 농촌구조조정사업 중점투자 방향

'99년은 국민의 정부 농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IMF 위기 극복을 위한 농가경영안정시책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99년 농림부문 예산은 경기침체로 농산물의 내수기반이 위축되고 농자재가격은 상승하여 농가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신규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경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였다.

'99년 농촌구조조정사업의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농산물 중간 유통 마진을 최대한 줄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유통개혁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둘째, IMF 관리체제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경영자금지원,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지원 재원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국민의 정부』 농정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 수출확대, 농·소·정 협력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업인자율경영 체제구축을 위해 농업인 별로 시설설치 및 운전자금을 종합지원하는 종합자금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포괄보조 성격의 예산을 확대 하는 등 투융자제도 개선도 반영하였다.

< '98년도 42조 구조개선 + 15조 농특세사업 예산규모 >

(단위 : 억원)

사 업 명	42조 + 15조계획	'92~'96	'97	'98	전년비 증감률 (%)
1. 생산기반정비	129,063	57,213	25,157	25,550	1.6
2. 농업기계화	30,720	18,216	4,518	3,661	△19.0
3. 시설현대화	19,699	10,340	3,362	3,413	1.5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17,266	8,420	2,557	2,434	△4.8
5. 정예인력육성	26,076	15,612	4,748	4,910	3.4
6. 소득원개발	24,682	15,463	5,554	5,965	7.4
7. 축산업구조개선	55,053	31,151	6,923	6,876	△0.7
8. 유통구조개선	37,027	17,051	5,672	4,831	△14.8
9. 영농규모화	25,408	16,099	3,808	3,840	0.8
10. 생활환경·복지개선	76,573	21,207	8,259	6,924	△16.2
11. 어업구조개선	37,760	18,294	6,530	6,247	△4.3
12. 임업구조개선	24,650	14,620	4,925	4,625	△6.1
계	503,977	243,686	82,013	79,276	△3.3

< '98년도 42조 구조개선 투융자사업 예산규모 >

(단위 : 억원)

사 업 명	42조계획	'92~'96	'97	'98	전년비 증감률 (%)
1. 생산기반정비	86,063	50,339	21,397	21,901	2.4
2. 농업기계화	30,720	18,216	4,518	3,661	△19.0
3. 시설현대화	17,699	9,940	3,126	3,253	4.1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12,226	7,044	2,047	1,999	△2.3
5. 정예인력육성	23,576	14,903	4,463	4,683	4.9
6. 소득원개발	24,682	15,463	5,554	5,965	7.4
7. 축산업구조개선	55,053	31,151	6,923	6,876	△0.7
8. 유통구조개선	22,477	12,867	4,543	4,320	△4.9
9. 영농규모화	25,408	16,099	3,808	3,840	0.8
10. 생활환경·복지개선	10,348	5,187	1,602	1,267	△20.9
11. 어업구조개선	24,225	14,345	4,713	4,742	0.6
12. 임업구조개선	21,500	13,320	4,319	4,107	△4.9
계	353,977	208,874	67,013	66,614	△0.6

< '98년도 15조 농특세 투융자사업 예산규모 >

(단위 : 억원)

사 업 명	15조계획	'92~'96	'97	'98	비 고
1. 생산기반정비	43,000	6,874	3,760	3,649	○ 채무상환예산 269억원 반영 별도
2. 농업기계화	-	-	-	-	
3. 시설현대화	2,000	400	236	160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5,040	1,376	510	435	
5. 정예인력육성	2,500	709	285	227	
6. 소득원개발	-	-	-	-	
7. 축산업구조개선	-	-	-	-	
8. 유통구조개선	14,550	4,184	1,129	511	
9. 영농규모화	-	-	-	-	
10. 생활환경·복지개선	66,225	16,020	6,657	5,657	
11. 어업구조개선	13,535	3,949	1,817	1,505	
12. 임업구조개선	3,150	1,300	606	518	
계	150,000	34,812	15,000	12,662	

3. 구조조정 추진성과('94~'97) 및 평가

가. 추진성과

42조 구조개선사업과 15조 농특세사업의 본격추진에 힘입어 짧은 기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 용·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이 어느정도 확충되고 영농규모화, 전문화가 촉진되는 등 투융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이 구조개선 사업착수전인 '86~'91년에는 마이너스 0.4%를 기록하였으나 구조개선 투자가 시작된 '92년부터 '97년까지는 성장률이 플러스 1.6%로 크게 향상되었고 같은 기간동안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6.82%로서 산업전체 증가율(5.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생산성도 증가하여 최근 5년동안 1.3배 증가하였다.

생산기반정비, 규모화, 시설현대화 등으로 농업구조가 개선되고 경쟁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경지정리율이 '92년 67%에서 '97년 83%로 향상되고 수해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율도 '92년 28%에서 '97년 39%로 높아졌다. 기계화, 규모화도 크게 진전되어 벼농사 기계화율이 '92년 88%에서 '97년에는 98%로 급신장하였고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쌀 3ha이상 규모화된 농가수는 '92년 25천호에서 '97년에는 35천호로 늘어났으며 돼지 1천두이상 사육농가수도 같은 기간동안 3배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농가소득이 연평균 1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소득작목과 농외소득원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평가

이러한 투융자결과 IMF 경제위기속에서도 주곡자급으로 경제·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사시사철 우리식탁에 신선한 채소·과일이 오를수 있는 연중 공급기반이 갖추어 지는 등 농업분야의 성장을 위한 물적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능력, 유통체계 등 소프트웨어 부문발전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능력·경험이 없는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부실화된 사례도 일부 발생하였고, 또 일부사업은 과도한 보조지원으로 자금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한 후 이를 유용하는 등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이 부적당한 사례도 있었다. 더구나, IMF위기에 따라 첨단영농, 고에너지 사용, 해외의존형 사업은 내수부진, 유가상승, 금융 비용 증가 등의 충격에 극히 취약한 면을 보인 사례도 상당히 있었다.

현재 전체 투융자 사업대상자 중 30% 정도가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는 회생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20%는 경영지도와 운영자금 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회생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과감히 퇴출시키고 회생이 가능한 사업자는 경영컨설팅, 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농업관련 투융자는 위와 같은 부실사례가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방대학, 민간자문회사 등을 활용한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며,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외 전문성과 심사평가 기능을 정립하는 등 농림사업의 집행 및 사전·사후 관리강화로 부실·비효율 투자를 방지하는 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II. 주요농정제도의 개혁

1. 농정추진조직의 개혁

새정부는 당면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도약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 정부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행정의 종합성·전략성·기동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행정조직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정부생산성을 제고시킨다.

셋째, 행정규제를 완화해 시장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제로 전환해 나간다.

넷째, 정책수행에서 시장원리와 경영효율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다섯째, 고객 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행정조직 체계를 만든다.

여섯째, 중앙기능을 지방에 이양하고, 정부기능을 적극적으로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한다.

일곱째, 환경과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기능은 확충하고, 통일 대비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이상의 기본원칙에 따라 1998년 1월 7일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14명의 심의위원과 8명의 실행위원으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 심의위원겸 실행위원회위원장 김광웅)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총무처의 정부측 조직개편안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공공정책학회 등에서 연구하여 마련한 개편안을 토대로 12차례의 실행위원회 회의와 7차례의 심의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합동회의, 수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998년 1월 2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편안에 포함된 농림조직부문의 개편안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농림조직의 주요 개편방향

- 1) 농업센서스 등 농업 기본통계 기능을 통계청으로 이관한다.
- 2) 농림부의 집행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
- 3) 본부 및 소속기관을 과감히 정비한다.
- 4) 동·식물검역 기능을 보완·강화한다.
- 5)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관리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한다.
- 6) 산림청의 지방조직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한다.

(2) 기구 및 정원조정

<표 1> 농림부 직제개편 현황

	차관보	실	국	관	과	담당관
현행	1	2	5	8	30	12
개편	1	1	6	5	24	16
증감		△1	+1	△3	△6	+4

- 본부 정원중 40인을 감축
 - 1급 △1, 2·3급 △2, 3·4급 △2, 4·5급 △3, 기능직 △32
- 소속기관 정원중 992인을 감축(1998년 763인, 1999년 229인)
 - 1급 △1, 2급 +1, 3급 +1, 4급 △5, 5급 이하 △845, 기능직 △143

<표 2> 농촌진흥청 직제개편 현황

	국	관	과	담당관	1차기관	2차기관
현행	2	3	10	10	13	27
개편	2	2	9	7	12	18
증감		△1	△1	△3	△1	△9

- 본청 정원중 34인을 감축
 - 2·3급 △1, 3·4급 △4, 4·5급이하 △3, 기능직 △26

- 소속기관 정원중 236인을 감축
 - 3·4급 △11, 4·5급이하 △51, 기능직 △174

<표 3> 산림청 직제개편 현황

	국	관	과	담당관	1차기관	2차기관
현행	3	2	11	8	9	40
개편	3	2	11	6	8	6
증감				△2	△1	△34

- 본청 정원중 10인을 감축
 - 4급 △2, 8급 △1, 기능직 △7
- 소속기관정원중 815인을 감축
 - 3급 △1, 4급 △5, 5급이하 △607, 기능직 △202

2. 협동조합의 개혁

가. 협동조합개혁 추진배경

그동안 농·축·임협 등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은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직선제 실시 등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조합의 합병추진, 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실시 등 사업의 전문화와 조직의 효율성 증진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경제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유통판매사업 확대로 농산물 공동판매의 시장점유율이 30%수준에 달했고 영농자재 및 생활물자의 원활한 공급과 신용사업을 통하여 자체 예수금을 투입, 농촌자금공급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지도사업분야도 조합원에 대한 영농기술지도, 경제사업지도, 회원조합 육성 등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협동조합이 생산·유통·가공·판매 등 경제사업에 소홀히 하면서 신용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중앙회 기구가 비대화되고 하향식 조직운영으로 조합원의 불만을 사고 있고 협동조합이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 되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94 협동조합법 개정이후 조합의 자율성은 크게 제고된 반면, 조합경영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못하여 경영부실을 초래하는 사례와 무엇보다 유통,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협동조합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협동조합 개혁위원회 활동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협동조합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협동조합을 농업인을 위한 봉사조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1998년 4월 13일 농업인대표, 생산자단체, 학계 등 각계전문가가 대거참여하는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기본방향은 농업인과 회원조합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 협동조합 사업운영의 전문화·효율화 추진, 경영여건변화에 대응한 조직·기능 정비 등이며 그 동안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개혁과제는 협동조합 구조조정, 협동조합 경영관리체제 개선, 협동조합 지도감독 강화 등 크게 3개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협동조합 구조조정」으로 중앙회 조직개편, 회원조합 구조조정 등이 다루어지며, 중앙회의 정비방안으로 경제사업은 도시점포 단계에서부터 물류센타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유통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신용사업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농민 지원(농업자금, 경제·지도사업 및 복지향상)을 효율화하도록 체제개편을 검토하고 품목별연합회 기능강화 및 협동조합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회원조합의 구조조정에는 조합합병 등을 통하여 부실조합을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협동조합 경영관리체제 개선」에 있어서는 책임경영제 확립, 이사회 기능 활성화, 임원선출제도 개선, 여성조합 참여확대안 등이며 여기에서는 중앙회의 경우 부회장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회원조합의 경우 일정규모이상 조합의 상임이사제 도입 의무화 및 자격요건 강화, 임원선출제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후보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셋째, 「협동조합 지도·감독강화」에서는 조합 자체감사 기능강화,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지도감사 기능강화, 회원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강화 등이 검토되었다.

다. 협동조합개혁 추진방향

IMF이후 공공부문은 물론, 금융기관과 기업 등 사회 모든 분야가 군살과 거품을 빼고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구조개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제에 협동조합도 진정으로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며 조직을 가볍게 하고 업무를 혁신하는 등 구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농업인이 살아야 농업도 살고 조합도 산다」는 기본이념하에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과 조직으로 농업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기준 잣대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는 약 3개월간 협동조합 개혁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여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지난 7월말 정부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협동조합이 농업인의 자조조직임을 감안,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건의한 개혁방안을 토대로 협동조합별 강력한 자체개혁방안과 농·축·임·삼협의 공동개혁안을 마련토록 하였는데 각 협동조합별로 자체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하여 '98. 8월까지 제출하고 '98. 9월까지의 중앙회 통합 및 지역이종조합간 합병을 포함한 4개 협동조합 공동개혁안을 제출토록 하였다.

한편, 농·축·임·삼협의 개혁안을 협의조정 및 추진을 위해 농림부내에 「협동조합개혁기획단」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제출한 자체구조개혁 방안은 협동조합별로 세부개혁일정, 유통기능 확충문제, 자회사 정비등을 2차례에 걸쳐 보완하여 강도높은 구조개혁계획을 확정하였다. 협동조합별 자체구조개혁 계획으로는 2000년까지 인력감축($\Delta 19.7\%$)과 조직축소(중앙회 $\Delta 166$ 부·소, 회원조합 $\Delta 896$ 개) 방안등을 추진하여 '98~2001년중에 4조 3,500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중앙회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4개 협동조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합별로 상이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중앙회 조직개편에 앞서 일차적으로 합동조합별 자체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중앙회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축소등 자체구조개혁을 선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4개 협동조합간 미합의된 중앙회 조직개편 문제는 협동조합 조직 자체의 시각보다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직형태가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농림부내에 구성된 「협동조합개혁기획단」에서 농업인 중심원칙, 고효율 저비용원칙등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농업인의 자조조직이라는 특수성과 기능의 다양성(경제·지도·신용)와 복잡한 이해관계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선의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앞으로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과 협동조합이 제출한 개혁방안을 기초로 국회에서의 논의와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업인에게 이익이 되고 농축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가. 농림산물유통구조개선

그 동안 수차례 농산물 유통개선대책을 추진한 결과, 산지에는 포장센타나 집하장, 소비지에는 도매시장·물류센타 등의 유통시설이 확충되고 도매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만한 유통비용절감 등의 성과가 미흡하여 농산물 유통정책에 대한 불만과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유통개방시장과 농산물수입이 자유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급속히 확산되어 수입과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구입이 점차 늘어나 소비지

에서 원하는 농산물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우리농산물의 판로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IMF사태에 따라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중요한 농산물 유통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의 유통개선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의 유통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유통개혁을 착수하였다. 이번 개혁은 과거와 달리 농업인·소비자·유통인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농산물 유통개혁(안)을 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이 건의(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난 7.23일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을 확정하였다.

(1) 유통명령제 도입 및 출하조절기획단 설치로 적정생산·출하조절

IMF사태에 따른 환율급등 및 이에 따른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농산물 생산비는 증가하는 반면 농산물가격은 그만큼 상승하지 않아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에 더하여 최근 소값과동·채소류 가격폭락 등으로 농업인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패·변질이 쉬운 채소류·우유 등의 근본적인 적정생산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소·상·정이 공동참여하여 면적조정, 출하조절, 출하규격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유통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과 지역별로 「채소류생산출하조절기획단」을 설치하여 지역별·시기별 생산출하물량의 계획적인 조정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채소류가격이 경영비의 80%이하로 3일이상 하락시에는 수매·시장격리 등에 자동 개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기에 정부가 개입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간상인의 발매기와 가격등락이 심한 채소류의 농협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소류가격안정기금을 현재 2,685억원 수준에서

2001년 4,500억원으로 확대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30%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 산지유통체계 혁신으로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체제 구축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소비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농업인의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농업인의 유통참여가 어렵고 농협도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산지에서의 유통혁신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협이 산지유통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농협을 경제권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경제사업의 규모화·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농협의 산지유통을 일시에 혁신해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우선 주산지농협을 산지유통 시범농협으로 육성하여 공동출하·규격출하·직거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97년에는 채소류 중심으로 30개소를 선정하였는데 '98년에는 과실류를 포함하여 60개소로 확대하여 선진화된 산지유통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2001년 150개 농협으로 확산시켜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공동출하비율을 현재 35% 수준에서 2002년 60% 수준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채소·과일 포장센타를 2002년까지 220개소, 미곡종합처리장 370개소, 축산물종합처리장 12개소를 건설하여 생산량의 30~40%를 산지에서부터 선별·포장·브랜드화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 산지유통시설 현황 >

(단위: 개소)

시 설 명	'97까지	'98	'99~2002	합 계
○ 농산물간이집하장	3,290 (269)	(50)	(440)	3,290 (759)
○ 농산물포장센터	78	34	108	220
○ 농수산물가공공장	1,355	78	567	2,000
○ 미곡종합처리장	253	50	67	370
○ 축산물종합처리장		4	6	10

※ 간이집하장 ()는 기존시설 보완개소수 임.

(3)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소비자가격 인하 촉발

IMF사태이후 실직, 임금삭감뿐만 아니라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직거래를 통해 환율의 영향을 덜 받는 농산물이라도 값싸게 공급하여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도시에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직거래장터를 금년중 50개소를 설치하고, 중소도시에는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시장을 2002년까지 150개소 개장할 것이며, 직거래 장터 시설비와 운영비도 신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소비자 직판기능을 활성화하여 일반 소매상의 가격인상을 견제하기 위해 차량 순회판매는 농·축·수·임협 공동으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금융점포에 직판코너 설치를 확대하겠으며, 농·수·축·임협 공동으로 대규모 직판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할인업체 등 가격과피점 확산을 위해 민간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터·물류센터 등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직거래알선 및 직거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민간업체와 생산자단체간 지원조건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여 산지 생산자단체와 연계, 농산물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을 '98년중 추진할 것이다.

(4) 농산물 물류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그동안 도매시장 위주의 농산물 유통에서 탈피하여 농산물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경매없는 예약·주문거래로 유통단계를 단축하기 위해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12개소 건설중에 있으며, '98년중에는 우선 4개소를 개장할 것이다. 물류센터는 유통단계축소 뿐만아니라 파렛트 출하, 기계화 하역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선진유통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물류센터 건설촉진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민간의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 지역에도 농수산물 물류센터 설치를 허용할 것이며, 기존 도매시장의 물류센터로의 전환('99년 2개소)을 유도하고, 건설중인 12개소 이외에 「공공소유·민간운영」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물류센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장초기 물류센터 운영정착을 위해서 산지 생산자조직을 물류센터 전속 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할인점·판매점 등 대형유통 업체를 판매가맹점으로 확보토록 유도하기 위해 매취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가맹점과의 전자상거래(EDI)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 소비자 유통시설 현황 >

(단위: 개소)

시 설 명	'97까지	'98	'99~2002	합 계
○ 농수산물도매시장	32	-	-	32
○ 농산물공판장	54	13	-	67
○ 농수산물 물류센터	12	2	4	18

(5)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및 도매시장의 운영방식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물류센터가 개장되고 직거래가 활성화되더라도 농산물의 대부분은 도매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정상화는 유통개선대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2001년까지 34개 공영도매시장을 차질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지방비부담을 완화하여 중앙정부 보조율을 30~50%에서 70% 수준으로 높이고, '99년부터 개장중인 기존공영도매시장의 시설개보수도 본격 추진할 것이다. 시설확충과 아울러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시설여건·거래액 등을 감안하여 도매상제의 도입이 가능토록 개방하였다.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경매를 의무화하여 기준가격 형성기능을 유지하면서 도매상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수익매매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도매시장을 경유하더라도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출하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매시장법인의 수지를 분석하여 상장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고, 하역제도를 개선하여 기계화를 촉진하겠으며, 중도매인의 경쟁경매촉진으로 중간상의 마진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불법행위 단속강화와 도매시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시범실시중인 가락동·대전 공영도매시장의 전산 경매를

확대하고, 출하주 등록제와 출하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가격등락을 최소화하여 출하자를 보호할 것이다.

(6)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30%수준 절감

유통효율화를 위해서는 산지에서 저가로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의 농산물 물류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결과 '97년 농산물 물류비는 6조 2천억원으로서 유통비용의 32%로서 국가물류비의 GDP대비 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업체류와 같이 부피가 크고, 부패가 쉬울 뿐만 아니라 인력에 의해 상·하차되는 농산물의 경우 물류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농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고, 판로도 확보할 수 있다.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농산물이 포장화, 파렛트적재, 일관수송, 하역기계화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한다.

우선,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내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인상을 추진하는 등 포장품과 비포장품의 차별화를 더욱 강화하고, 포장화 우수법인에 대한 도매시장평가지 우대 등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단계적으로 비포장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반입을 제한해 나갈 것이다.

또한 124개 주요농산물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90% 이상 되도록 '98년중 재정비를 완료하고, 규격포장재에 대해서만 포장재가 지원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하역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등 하역기계화장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원조건도 대폭 완화해 나갈 것이다. 산지유통시설도 일관수송, 하역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표준설계도를 보급하고, 기존 산지유통시설의 개보수도 추진 할 것이다.

(7) 기대효과

이러한 내용의 유통개혁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산지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계약재배된 농산물을 대량으로 포장화·규격화·브랜드화하여 공동출하비율이 60% 수준까지 확대되어 시장교섭력이 강화되고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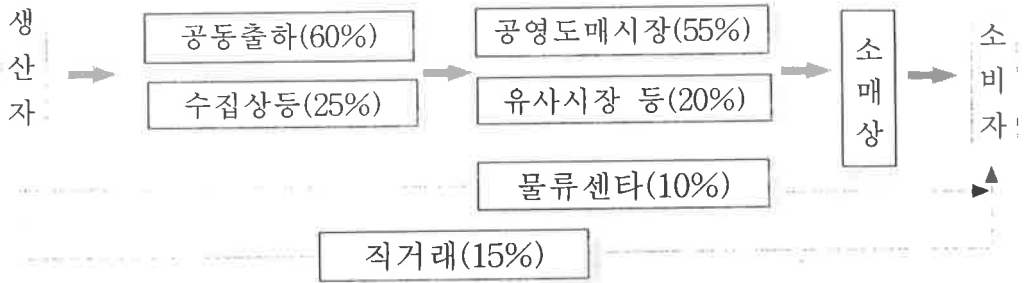
또한, 주요거점지역에 34개 공영도매시장, 16개 물류센타가 개장되고, 유사도매시장이 제도권으로 흡수될 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따라 출하자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경쟁에 의한 공정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다.

소비지에서는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의 다양한 직거래 체제가 구축되고, 농산물 직거래 비율이 25%까지 확대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농산물 구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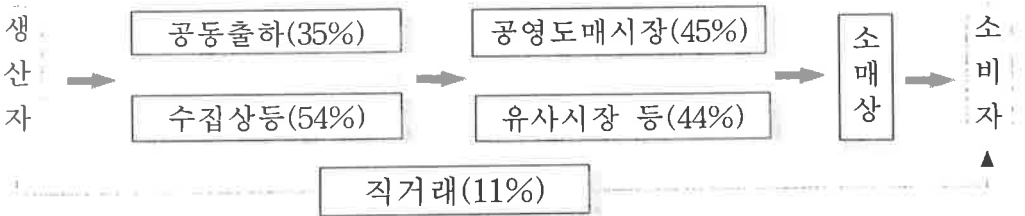
이와같이 산지·도매·소매단계의 유통상의 비능률이 과감히 제거됨으로써 농산물 유통비용을 현 19조원에서 14조원으로 30% 수준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값의 농산물 구입이 가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개혁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002년 농산물 유통모습 >

□ 대책전



□ 대책후



나.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수산물의 조속한 양육 및 판매와 직출하 촉진을 위해 '98년 771억 원 을 투자하여 위판장 1,279평, 수산물종합판매장 6개소, 활어 및 냉동수송 차량 20대,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1개소를 시설하였고, 감천항 수산물 유통가공단지과 서울 서남권 수산물공판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연근해 수산물의 산지거래제도 개선을 위하여 '95년부터 '97년부터 3단계에 걸쳐 연근해수산물 전품목을 자유판매제로 전환하여 어업인이 판매경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98년도에는 유통시장개방과 변화되는 수산물 수요 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수산물 유통구조개혁을 위해 유통구조 개혁 기획단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2회에 걸친 공청회와 3차례의 위원회를 거쳐 대책안을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법률이 확정되는 대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세부실천계획을 확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기본방향은

첫째, 어촌의 활력회복과 소비지 도매시장의 도매상체제 전환에 대응 및 할인 산업태의 산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지 대형위판장을 도매시장화하고, 산지종합가공처리 시설을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어촌에 환원하며 소비지 상인의 산지접근이 용이하도록 산지유통을 개선하고,

둘째, 소비지 도매시장에서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며,

셋째, 생산자 단체인 수협이 유통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존 도소매체제와 경쟁토록 하여 소비자 지향의 직거래를 확대해 나아가고,

넷째, 세계수산물 소비량의 30% 상당을 점유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수산물 거래 원활화를 위해 부산, 인천권의 가공단지 조성 및 아울러 국제 수산물 거래센터를 구축하여 나갈 계획이다.

4. 투융자 제도의 개혁

농어촌 투융자사업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과 점검·평가 등에서 투융자 제도와 사업추진절차 등 지원제도 상에 아직도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 투융자의 기본방향을 과거의 수혜적이고 보상중심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하나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각종 농어촌지원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선하고, 농업경영체의 자생력과 책임 경영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생산자인 농업인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정책자금집행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같은 시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농업인등 개별 경영체에 대하여는 보조지원을 감축하고 융자 지원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에 대한 과도한 보조지원으로 과잉수요를 낳고 자금의 편중지원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보조는 원칙적으로 생산·유통기반시설 등 농업 SOC적 성격의 공공사업과 환경농업목적 사업 등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한정할 계획이다.

농업인 등 개별경영체지원 사업중 '97년 13개, '98년 14개 사업에 이어 '99년에는 11개사업을 보조 지원에서 융자로 전환하였고 2000년까지 대상사업전부를 융자 전환해 나가는 동시에, 생산자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지원도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융자지원 조건도 사업별로 공공성의 정도, 농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업주체의 소득발생정도 등에 따라 재정비하되, 일반 융자비율은 70%, 투자규모가 크고 사업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80%까지 융자지원 해 나가며 융자지원 기간도 시설내용연수 등 사업성격에 따라 4-5단계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효율성 위주의 투융자 지원체계로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품목별, 기능별로 분산지원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자금을 통합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인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적기에 적량을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책임경영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자금대출기관이 사업자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담당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집행관리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99년부터 종합자금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원예 분야에 1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농업경영주체인 농업인의 기술·경영능력 향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기술과 회계·재무관리를 포함한 벤치마킹기법도입으로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농업부문에 경영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지도계통과 농·축협 및 민간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 지원체계를 연차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현재 품목별로 운용되고 있는 농업관련기금을 기금의 성격에 따라, 구조개선과 가격안정·유통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연차적,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종전에는 국고보조사업이 중앙에서 사업메뉴를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해 옴으로써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96년에는 지자체가 선호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등 소액보조사업을 통합하여 실적·가산금 지원과 연계 운영하는 포괄적 보조지원 방식의 사업을 도입하였고, '99년부터는 소액보조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묶어 실질적인 포괄지원형태가 되도록 하였다.

지자체의 농정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자체의 재량권을 한층 높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율이 지방재정 능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옴으로써 재정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사업포기 또는 반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으나, '99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정이 열악한 하위 20%, 지자체에 차등보조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추진성과를 보아 경지정리 사업 등 여타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사업 추진체계와 추진방식을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농정수요에 부합하는 투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사업의 투융자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농산물유통,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품질과 안전성제고 등 경쟁력 제고사업과 수출지원 사업은 확대해 나가고, 공급과잉사업, 부실우려사업, 에너지가 많이 드는 사업, 비환경사업,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 사업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된 사업 등은 과감히 중단 또는 축소해 갈 계획이다.

농림사업관련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부실 경영방지를 위해 적정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였다. 특히, 일정 규모이상 대형사업과 첨단시설 설치사업은 전문가의 객관성있는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사업절차를 개선하였고, 사업비 집행실적의 검증 및 정산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농림사업비가 유용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현장점검·감사, 주요사업장에 대한 관리대상과 관리카드작성 유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에 법인경영체의 부실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원대상 법인경영체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부실법인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였고, 자산 등의 인정을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나 통장입금 기준으로 범위를 엄격히 하는 등 지원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전문성과 책임성 결여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시·군 농발심의회의 기능을 대폭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발심의회의 기능을 시·군 농발계획 수립과 농림사업의 사후평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고 농·축·임협의 실무전문가와 농업인 단체의 지역대표, 품목별, 농업인 조직대표 등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 「열린농정」 적극 추진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농림부는 농업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농업인과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농업인의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며, 농림공직자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중앙단위 및 지방단위의 농정추진조직, 기능을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위주로 개편하는 참여농정, 현장농정등을 통하여 「열린농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정개혁을 위한 농정개혁위원회, 유통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 농업인, 시민, 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참여시키고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였으며, 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간담회(1998. 3. 13), 농·소·정원로 회의(1998. 5. 29) 등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장관주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양파, 축산물, 우유 등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인·소비자·유통인·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촉진 캠페인도 실시하는등 「농업인·소비자·정부」가 함께하는 「참여농정」을 구현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농촌현장으로 찾아가 농업인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주는 「현장농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장농정의 일환으로 장관이 주말을 활용하여 직접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지도와 농업인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주고 농정시책에도 반영하는 「이동장관실」을 운영하여 농업인 및 언론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장관실」 운영은 1998년 3월 8일 한우농가가 밀집된 경기도 안성지역을 시작으로 1998년 10월1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총 61회를 운영하였다. 건의사항 459건중 150건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146건은 검토후 1주일

내 조치하였으며, 불가사항(42건)은 현장에서 즉시 통보하고 지역숙원사업 지원요구 등 예산수반사항(121건)은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검토,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장관실」 운영으로 정부와 지자체, 농업인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데 대해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농업인·농업인 단체대표 등을 1일 명예장관에 위촉하여 농정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일명예장관제」를 7. 22부터 월 2회 시행함으로써 현장농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Ⅲ. 행정규제 개혁 및 농가경영 안정대책

1. 농림수산 행정규제의 개혁

가. 목표 및 방향

'98년도 농림분야의 행정규제완화는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직·간접적 이익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진입규제 및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제한을 폐지·완화하고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여 규제시스템을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며, 규제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명확화 하는 등 투명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농업기반의 보전, 농산물 품질 및 위생유지, 생산자와 소비자보호, 농업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는 그 공익적 기능유지 측면에서 계속 존치시킬 계획이다.

나. 행정규제개혁 추진내용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부담경감 차원에서 초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98. 4)하여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초지조성 및 전용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초지조성허가권자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였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98. 4)하여 전용면적 100㎡(중전 85㎡)이하의 농어촌주택 신규취득시 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였다.

또한 검역시행장지정및검역물관리요령(농림부 고시)을 개정('98. 4)하여 원피검역시행장간 2km이내에 있는 2개의 수입원피가공장 검역시행장에는 관리수의사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피 공동검역시행장

이용거리를 확대(500m→ 1km)하여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한편, 임업분야에서는 임업후계자·독립가인정절차규정을 개정('98. 6)하여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업후계자 선발심의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보전임지관리및대체조림비등의부과규정을 개정('98. 4)하여 스키장·골프장·관광지 등에 임업진흥권역을 편입할 경우 편입면적 이상을 대체지정토록 한 것을 폐지하였고, 스키장에는 국·공유림을 합쳐 50ha, 50%미만으로 편입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였다.

수산업분야에서는 우선, 일부 수산물에 대한 조업 금지기간 및 사용어구 크기를 축소하고 조업구역을 확대('98.8. 27)하였으며, 해상교통·관광·유통 또는 생활중심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항·포구 등도 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기능 어항 개발의 토대를 구축('98.8.18)하였고,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어항시설사업 소요비용의 예치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어항시설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함으로써 어항건설사업에 민자유치를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상과 같은 단편적인 규제완화 작업 이외에도 농림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연구기관, 민간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였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농업인, 농업인 단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98년 중 농림부 총규제의 50%이상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이의 실행을 위해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2. 농가경영 안정대책의 추진

IMF경제위기아래 농자재 가격상승과 이자비용 증가 및 농산물 소비 감소로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농가부담 경감은 대선공약사항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축산 및 시설원에 농가의 정책자금 상환(5,752억원)을 3~9개월 유예 조치하였으며 저리의 농업·축산경영자금을 지난해보다 6,500억원이 늘어난 4조 4,700억원을 확보·공급하였다. 이와 함께 11조 2,842억원에 달하는 농특회계와 농·축산경영자금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3.5%P의 금리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1,7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 가운데 2%P를 인하 조치하였다. 또한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 6조 1,619억원에 달하는 농림부소관 기금에서 자원되는 각종 농업자금은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금리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농·축협도 농가부채 경감조치에 동참하여 금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6조원)을 6~12개월 연기 또는 대환조치하고, 이미 연체된 상호금융자금(3조 5천억원)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의 징수를 6~12개월 유예하기로 조치하였다.

한편, IMF관리체제이후 농업부문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10월이후 각종자금의 상환기일이 집중도래하고, 농촌금융의 관행인 연대보증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농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선공약사항을 조기에 이행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채대책에 대한 합리적 방안마련을 위해, 농민단체, 학계,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8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98.10월부터 '99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 자금중 IMF로 어려운 사업분야 자금만을 선별하여 2년간 상환을 연기하고, 부실경영체의 정리·인수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상호금융자금은 협동조합 책임하에 금리를 2%p 수준 인하하고 '99말까지 상환이도래하는 자금에 대해 2년간 상환유예하도록 하고 고금리인 상호금융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해 특별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동조합과 정부가 함께 강구하는 것이다.

3. 사료곡물과 영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가. 사료곡물의 수급안정 지원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으로 촉발된 외환·금융위기는 환율을 1997년 10월 853원/\$에서 1,400~1,600원/\$ (최고 1997년 12월 24일 1,850원/\$) 까지 급등시켰다. 급기야 1997년 11월 21일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12월 3일에 IMF 자금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그 조건으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IMF의 권고를 수용하는 공식합의에 도달하였다.

환율급등은 외환자금 부족을 야기하여 밀·사료 등 원료곡물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신인도가 하락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의 건전 자기자본비율 기준 8%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원료 곡물 도입상의 수입 신용장(L/C) 개설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이 경색되고 자금회수 증가속에 결제분이 도래한 사료 제조업체에 현금수요가 증가되며, 일부업체의 출고조절로 시중유통이 왜곡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농림부는 IMF 프로그램하에서 외환·금융위기에 대처하여 사료 원료 곡물 도입상의 L/C 개설지원, 농업용 면세유류, 비료·농약 등 농자재의

안정공급, 주요 농산물의 수급동향 점검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97년 12월 16일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상황실」을 개설·운영하였다. 외환위기가 일단 진정되어, L/C 개설과 해외 신용자금 사용이 호전되고, 원료곡물 재고 2개월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등 상황이 개선되면서, 1998년 2월 25일에 상황실을 축소하여 유통국으로 이관하였다.

밀·사료 원료곡물 L/C 개설·지원('98. 6.25)

(단위 : 백만달러)

	밀 (재분협회)	사 료			총 계
		사료협회	축 협	소 계	
'97. 12. 16~6. 25 (농·축협)	151.9 (26.0)	556.4 (131.6)	241.8 (241.8)	798.2 (373.4)	950.1 (399.4)

GSM-102 자금 사용실적('98. 6.25)

(단위 : 백만달러)

품 목	계 획	배 정	CCC 승인실적			비 율	
			L/C 개설	L/C 미개설	소 계	계 획 대 비	배정액 대 비
사 료 원 료	343	343	179.8	8.9	188.7	55	55
밀	210	210	77.9	38.1	116.0	55	55
대 두	200	200	108.0	14.7	122.7	61	61
옥 수 수	137	137	117.2	-	117.2	86	86
소 계	890	890	482.9	61.7	544.6	257	257
육 류 기 타	170	170	39.0	129.2	168.2	99	99
계	1,060	1,060	521.9	190.9	712.8	67	67

※ 1. 추가배정 3억 6,000만달러(사료원료 9,300만달러, 밀 6,000달러, 대두 1억달러, 옥수수 3,700만달러, 육류·기타 7,000만달러)

2. 원면 3억 2,000만달러, 원피 1억달러, 목재 2,000만달러 별도

사료 원료곡물 도입의 L/C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협을 중심으로 수입 신용장을 직접 개설하도록 하였고, 미국 농무부의 수출신용자금 General Sales Manager : GSM-102) 등 해외 신용자금을 확보하여 사료 원료곡물 외상도입을 위한 소요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998년초에 확보한 GSM-102자금중 6억달러와, 4월중 추가확보한 자금중 2.9억달러 등 총 8.9억달러의 신용자금을 곡물류 수입에 배정하여, 6월 25일 현재 약 5.4억달러를 밀, 대두, 옥수수, 사료 원료곡물 도입에 사용하였다. GSM-102 자금외에, 캐나다, 호주의 소맥위원회(CWB, AWB)로부터 수출신용을 제공받았으나 민간신용자금의 이용실적은 작았다.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xport Development Corporation : EDC)와 캐나다 농산물 수입을 조건으로 1998년 3월 30일에 총 2억 900만 캐나다 달러(곡물류 9,900만)의 수출신용 사용에 합의하였다.

그 밖에도 영세 사료업체의 곡물류 도입에 따른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사료원료 곡물류 수입을 대행하는 사료협회에 담보로 제공하는 어음을 특별신용보증대상에 포함하고, 기업당 500억원 범위내에서 실수요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사료 유통과정에서 사재기나 가수요, 그리고 제조업체 등의 출하조절로 인한 수급불안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품공장에 농산물검사소 직원을 상주시켜 출고를 독려하고, 대리점에 대한 유통동향 점검 등으로 유통부조리를 집중 단속하였다. 밀가루 등 농림부 소관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적발로 소비자들에게 물품이 품귀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상황실」 개설이후 참깨, 밀가루 등 매점매석 사례 9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1998년 2월말 이후 생필품이나 사료의 사재기에 관한 적발 사례가 없어, 수급안정을 반증하고 있다.

나. 영농자재의 안정공급

환율급등과 고금리로 농자재의 가격상승을 기대한 가수요를 불식시키고 제조업체의 원활한 생산지원을 위하여,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을 1998년초에 조기 현실화하였다. 1998년 2월 현재 1997년 11월 대비하여 배합사료 36%, 요소비료 43%, 농업용 면세유(경유기준) 72%가 상승하였다. 이는 환율을 1,400원/\$를 기준한 것으로, 환율진정과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수차례 조정되었다.

유가인상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998년에도 농업용 유류에 대해서는 면세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물량도 전년대비 5% 증가한 259만kl를 배정하였다. 점차 사용이 증가하는 농업용 LPG에 대해서도 1998년부터 면세혜택을 추진하여, 첫째에 10,700톤을 공급하게 되었다.

비료, 농약 등의 안정적 물량확보를 위해 농협이 조기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생산 선도금 등으로 농약제조업체에 500억원, 비료 회사에 430억원을 지원하였다. 농약은 1998년중 농협구매를 전년대비 30.5% 확대하여 2,060억원에 상당하는 물량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따른 사료대체를 위해, 475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조사 및 생산확대, 남은 음식물 사료화, 자가 배합사료 시설지원 및 섬유질 사료 제조시설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부존사료 활용을 극대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환율급등으로 발생한 농기계 가격인상 요인을 인건비 절감, 경영개선 등으로 흡수하여 1998년 농기계 가격을 전년대비 9% 상승한 수준에서 안정시킬 계획이다. 농기계생산 비축자금 500억원을 조기에 지원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금리도 연 5%에서 4.5%로 인하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농자재 재고량과 판매 동향

	재 고 량			제 품 생 산 량		
	전년동기	'98. 2	비 고	전년동기	'98. 2	증감율(%)
배 합 사 료	-	2,492천톤	원료(46일분)	53,478	46,472톤/일	△13.1
면세유한도	-	-	-	770	786 l/일	2.0
비 료	764	547천톤	제품(농협)	3,643	5,747톤/일	57.8
농 약	11,576	11,626천톤	제품(공장)	108	66톤/일	△38.9

IV.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있는 경영주체의 육성

가. 배경

WTO체제 출범과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농어업분야에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농어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 추세로 전문기술농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농어업 인력육성이 시급하게 되었다.

특히 농어촌 노동력의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농어업 생산성 향상 둔화, 농어촌사회의 활력 감퇴 등 산업간·도농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내 농어업을 경쟁력있는 기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고급 생산 기술과 경영기법을 갖춘 농어업전문인력 육성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방향

가족노동력에 바탕을 둔 개별경영체와 농업조직에 바탕을 둔 법인경영체로 구분하여, 개별경영체는 후계자, 전업농, 선도농업경영체로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법인경영체는 농업생산 및 이와 관련된 저장·가공·유통 등 2·3차 산업기능을 포함하는 Agribusiness의 중심체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농림계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도 확대·개편하여 농업인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업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토록하여, 농업인 스스로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기술컨설팅을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경영모델을 발굴·보급함으로써 경영체의 발전 수준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다. 농어업인력 육성시책

(1) 농어업인 후계자를 매년 1만명 수준 선정하여 육성·지원

지난 '81년부터 농어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97년까지 총 106,778명의 농어업인 후계자를 선정, 1조 4,965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

'88년부터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왔으나,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92년부터 매년 농어업인 후계자를 1만명씩 지속적으로 선정·육성하여 전업농·선도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8,789명을 선정하여 1인당 20~50백만원씩 총 2,654억원을 개인별 영농어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

〈연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현황〉

구 분	'81~'95	'96	'97	'98	합 계
○ 인 원(명)	88,394	9,010	9,374	8,789	115,567
- 농 업 인	80,416	8,227	8,526	7,862	105,031
- 어 업 인	7,978	783	848	927	10,536
○ 지원자금(억원)	10,465	2,000	2,500	2,654	17,619

(2) 2004년까지 15만호의 전업농 육성

우리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단위 전업농을 확보할 목적으로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가족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을 주된 작목으로하여 최근 3년이상 그 품목을 계속 경영하고, 영농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장비조작능력을 가지고 있는 55세이하 경영주를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발하여 2004년까지 15만호를 전업농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97년까지 71,229호의 전업농을 선정하여 1조 9,3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8년에도 7,300호에 농지구입지원 등 6,089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쌀전업농의 경우 '97년까지 6만호를 선정하는데 이어 '99~'2002년 간 매년 1만호씩 총 4만호를 추가 선정하여 자금 등 영농기반확대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3) 선도농업경영체 육성

경영규모, 시설장비, 경영능력 등에서 가장 앞서가는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여 일반농가와 농과계 학생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97년까지 190개소를 선정하여 129억원을 지원하였고 '98년에도 20농가를 선정하여 12억원을 지원하여 각 분야의 모델적 농어가로 양성해 나가고 있다. 이 사업은 '98년까지 시행한 후 '99년 이후에는 그 취지를 전업농육성사업 등으로 승계시키고 기 투자된 시설의 효율적 사용에 초점을 둔 사후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4) 법인경영체의 육성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농작업의 대행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소규모 농가들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제도를 도입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97년 12월말 현재 5,809개소(영농조합법인 4,214개소, 농업회사법인 1,595개소)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법인의 난립 및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사업 지원 대상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총 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운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한 경영상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 회생불가능 법인에 대한 퇴출 유도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5) 농업교육의 내실화

농어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기초인력육성을 위해 자영자 양성고등학교를 도별로 1~2개교씩 농고 9개교, 수고 3개교를 선정하여 자동화, 현대화된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 등을 갖추도록 '98년까지 523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입생 입학지원율이 향상되고, 지원도 군단위에서 도단위로 광역화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도교육청 등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여건에 알맞는 농림어업의 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농림수산계 대학과 산업대학 중에서 지역, 기능, 분야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대학을 선정, 첨단유리온실, 유전공학 등 기술·연구 개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1개교당 30~50억원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키로하여 '98년까지 총 306억원을 지원하였다.

특성화대학은 지역별 특정한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전문농업인력 양성, 농업인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기능 강화 등 지역농업발전과 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로 활용토록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영농정착 의욕과 사명감 있는 정예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젊고 유능한 인력을 모집하여 농업에 종사할 중견 전문경영인으로 양성코자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설립, '97. 3월에 개교(정원 : 6개과 240명)한 바 있다.

(6) 농업경영혁신 추진

21세기 선진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농업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가족단위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경영체 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외에 농업인들이 경영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벤치마킹기법과 경영·기술컨설팅을 농업분야에 적극 도입키로 하였다.

벤치마킹은 농업인 스스로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고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보완해야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진단하여 경영개선을 통해 최고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품목별로 농업인 스스로 자기수준을 진단해 볼 수 있는 표준진단표를 작성하여 보급하기로 하고, 우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업전문가들이 '98년 8월까지 품목별 경영핵심사항을 선정하여 쌀·한우 등 30개 품목의 진단표를 개발, 일선 농가에 지도계통조직을 통하여 보급하였다.

농업인들은 표준진단표 작성을 통해 농업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진단결과를 다른 농가와 비교해보아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하여 최고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투융자의 효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향후 위의 30개품목 외에도 다른 품목들에 대한 표준진단표를 추가로 작성 보급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종전의 평균적·획일적 교육방법을 탈피하고, 수준별·중요관심 사항별 교육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행정기관, 농촌지도기관, 농과계대학, 생산자 단체, 민간컨설팅 업체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경영·기술컨설팅 체계를 확립하여 농업 경영·기술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조달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사업별, 품목별 위주의 정책자금지원 방식을 경영체별, 발전단계별로 지원해 나가는 종합 자금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7)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 및 영농참여 유도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영농주체로서 전문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후계자 선정시 여성농업인을 20%까지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를 시행하여 영농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고,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교육, 경영 능력개발 교육, 농기계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아·탁아소시설 확충, 의료서비스 개선 등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참여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8) 어업법인 경영체의 육성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96년말 도입된 영어조합 법인의 경우 '97년말 현재 122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바, 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부실법인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의 기계화·현대화

가. 생산기반 정비

(1) 2004년까지 진흥지역 중심으로 우량농지에 대한 경지정리 완료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필지의 규모화, 용·배수로 정비 및 구조물화, 농로의 정비와 환지를 통한 분산된 개인농지의 집단화를 하는 사업으로, 영농기계화 노동시간의 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어 쌀경쟁력 제고 대책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다.

경지정리사업은 2004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 665천ha와 농업진흥지역 밖 135천ha를 합쳐 800천ha을 완료할 계획으로서, '97년 봄까지 진흥지역은 86%인 572천ha를 추진하였고 진흥지역 밖은 목표량의 64%인 86천ha를 완료하였다

'98년도에는 '97년 가을에 착수한 20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에 12천ha를 착수하여 '99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일반경지정리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 논면적	목 표	'97까지	'98계획	'99		2000~ 2004
					마무리	착 수	
○ 사 업 량	1,163	800	658	20	12	9	101
- 농업진흥지역	745	665	572	20	12	9	52
- 농업진흥지역밖	418	135	86	-	-	-	49
사 업 비	-	95,204	47,710	5,590	3,292		38,612

※ 마무리 기준

(2) 우량농지 200천ha를 대구획경지재정리 추진

대구획경지재정리는 이미 경지정리는 되었으나 필지규모가 소구획으로 대형농기계 영농이 어렵고 농로가 없거나 좁아서 농기계 통행에 불편하며 용배수로는 관배수 기능이 겸용이거나 토공으로 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운 지역을, 필지규모는 3,000평 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용수로를 분리 구조물화하며 농로를 대형기계 및 농산물 운반에 편리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여건이 불리한 평야부 우량농지 200천ha를 개발할 목표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94년부터 시작하였는데, '98년 봄마무리까지 55천ha를 완료하여 28%를 달성하였으며 '98년도 가을에는 12천ha를 착수하여 '99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이 사업은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 사용과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도록 경지재정리함으로써 전문영농조직이 대규모로 영농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쌀생산비를 줄이는 등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보다 큰 효과가 있다.

<대구광역시 재정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97까지	'98계획	'99	2000이후
○사업량(천ha)	200	41	14	12	133
○사업비(억원)	50,132	10,494	3,649	2,498	33,491

(3) 밭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밭기반정비 확대 추진

전체 밭 761천ha중 개발여건이 좋은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 110천ha를 대상으로 2조 5,794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민식품 소비구조 변화에 따라 채소, 과일 등 밭작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논에 재배되는 시설채소 등 밭작물을 밭으로 유인하여 쌀자급기반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97년까지 21.6천ha를 대상으로 4,305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경작로, 관정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였으며, '98년도에는 8천ha를 대상으로 1,987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투자할 계획이다.

<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구 분	목 표	'97까지	'98계획	'99이후
○사업량(천ha)	110	21.6	8.0	80.4
○사업비(억원)	25,794	4,305	1,987	19,502

(4) 기계화 경작로 22천km를 2004년까지 확·포장 완료

영농의 전 과정이 기계화, 대형화, 첨단화 되는 추세이며, 영농의 편리함 뿐만아니라 농업경영인의 일상생활 편리를 위해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경지정리된 지역의 주요농로 22,000km를 확·포장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유통시설간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 촉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쌀경쟁력 제고, 농산물 유통개선 촉진 및 영농 기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97년까지 3,477억원을 투자하여 3,508km를 확·포장하였고, '98년도에는 2,130억원을 투입, 2,100km의 농로를 포장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추진실적 및 계획 >

구 분	목 표	'97까지	'98계획	'99이후
○사업량(천ha)	22,000	3,508	2,100	16,392
○사업비(억원)	28,600	3,477	2,130	23,023

(5) 수리시설 개보수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중 재해취약시설과 흙수로 12,70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수지를 비롯하여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11,233개소의 수리시설중 '45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2,059개소이고, 용·배수로의 경우는 45천km중 67%인 30천 km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 시설의 현대화 등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91개소, 지방관리방조제 1,401개소 등 전국 1,492개소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5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48%인 718개소에 달할 뿐만아니라 방조제 외측보호 사석의

이탈,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제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에 의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 사업의 확대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97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조수리시설 4,706개 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46개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310개 지구에 총 7,92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에는 2,967억원을 투입하여 275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을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

구 분	개보수 대상		'97까지		'98계획		'98이후	
		%		%		%		%
	개소							
○ 사업물량	14,200	100	5,062	35.6	275	1.9	8,863	62.5
- 농조수리시설	12,708	100	4,706	37.0	109	0.9	7,893	62.1
- 국가관리방조제	91	100	46	50.5	9	9.9	36	39.6
- 지방관리방조제	1,401	100	310	22.1	157	11.2	934	66.7
사업비 계	억 45,981	100	7,922	17.2	2,967	6.5	35,092	76.3

(6) 배수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은 하절기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수리시설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습침수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재해대책사업이다.

전국의 상습침수 농경지는 174천ha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동진강, 만경강, 안성천, 삽교천 등의 큰 하천변과 그 지천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수렁논 등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하배수개선사업의 대상면적은 33천ha에 달하고 있어 2010년까지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97까지 상습침수 농경지 및 저습답 207천ha중 81천ha가 완료되었으며, '98년도에는 127개 지구에 1,795억원을 투입하여 이중 28개지구 4천ha를 완공하여 배수개선율을 41%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배수개선사업 추진계획 >

구 분	대 상		'97까지		'98계획		'99이후	
	천ha	%	천ha	%	천ha	%	천ha	%
○ 사 업 량	207	100	81	39	4	2	122	59
- 지표수	174	100	79	45	4	2	91	53
- 지하수	33	100	2	6	-	-	31	94
○ 사 업 비	34,000	100	7,808	23	1,795	5.3	24,397	72

(7)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농업진흥지역내의 50ha이상 한해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등 지표수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있다.

'97년까지 총논면적 1,163천ha중 894천ha에 대한 용수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 논 735천ha에 대한 수리시설을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하여

신규개발 96천ha를 계획하고 있으며, 용수부족지 150천ha에 보강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다.

'98년도에는 3,883억원을 투자하여 56천ha에 대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중 5천ha를 완공할 계획에 있고 연차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

총논면적	목 표	'97까지	'98계획	'99~2004	2004이후
1,163천ha	1,100	894	5	84	117

(8)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농지조성 등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새로운 간척토지를 창출함과 아울러, 육상운송 거리단축, 생공용수 공급 기반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행중인 새만금지구를 비롯한 7개지구, 125천ha를 대상으로 '97년까지 36%(14,457억원)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고, '98년도에는 44%(국고 1,675억원, 농지관리기금 1,660억원 계 3,395억원)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

지구별	개발면적 (ha)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 사업비			사업기간
			'97까지	'98계획	'99이후	
계(7지구)	125,530	40,615	14,457	3,335	22,823	
영산강(Ⅱ)	20,700	3,524	3,301	223	-	'76~'98
미호천(Ⅱ)	4,430	1,648	681	212	755	'89~2000
금 강(Ⅱ)	43,000	4,572	1,016	300	3,256	'89~2004
홍 보	8,100	2,224	989	200	1,035	'91~2001
영산강(Ⅲ-1)	13,160	5,723	1,083	260	4,380	'85~2003
영산강(Ⅲ-2)	7,840	2,414	675	110	1,629	'89~2004
새만금	28,300	20,510	6,712	2,030	11,505	'91~2004

나. 농업시설현대화

(1)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확대

농가가 생산한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종합적으로 일관 처리하는 현대화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고, 쌀의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낮추며, 고품질의 지역별 특산미를 공급해 나가는 동시에, 수확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저장하여 가격안정 및 가격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97년까지 253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한데 이어, '98년에는 50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인근 쌀 작목반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

(단위 : 개소, 억원)

	'91~'97	'98계획	'99~2004	계
개 소 수	253	50	97	400
사 업 비	3,992	700	2,274	6,966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 및 토양등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 풍·흉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받기반정비, 관수시설의 확보, 비가림시설, 공동육묘장 설치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농작업의 생력화와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기계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리온실, 첨단생산시설과 예냉시설 등 유통시설을 갖춘 생산·유통 종합단지로서 과수 900개소, 시설채소 530개소, 화훼 200개소를 2004년 까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첨단시설을 갖춘 유리온실 설치를 확대하고, 온실의 표준화 및 시설자재 국산화로 설치단가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며,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삼생산기반의 확충과 인삼유통지원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수출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

첨단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시설원예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양액재배, 자동화기술 등을 현장어로 기술과제로 선정하고 생력화 기술을 개발하여 파종·수확등 전작업 기계화를 추진하며, '99년까지는

규모화 현대화된 생산시설과 유통·연구 교육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첨단시설원예 농산물생산단지 1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98 원예·특작, 생산·유통 및 인삼류 지원사업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지 원 계 획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원예·특작 생산·유통						
○ 채 소	79	163,307	56,144	29,752	44,750	32,661
-시설 채소	30	129,711	51,885	25,942	25,942	25,942
-양념 채소	7	22,876	2,287	2,288	13,726	4,575
-고랭지 채소	18(50)	9,720	1,872	1,422	4,482	1,944
-월동 채소	5	1,000	100	100	600	200
○ 과 수	130	192,790	19,279	19,279	115,674	38,558
○ 화 훼	10	42,482	8,496	8,496	16,993	8,496
○ 특 작	128	63,996	6,399	6,399	38,397	12,801
인 삼	335ha	226,600	660	660	36,960	188,320
○ 식재 사업	275	220,000	-	-	33,000	187,000
○ 시설 자재	60	6,600	660	660	3,960	1,320

(3) 축산시설 현대화

'98년에는 축산시설현대화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축산물종합처리장, 축산물공판장, 냉장육판매업소시설개선 등 축산물 유통체계개선과 사료공급기반확대를 위해 전업농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농가를 규모화 하고 사육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2000년까지 총 10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개소를 완공하고 7개소는 건설중에 있으며, 1개소는 취소하였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본격 가동되면 선진국 수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경영체가 생산·가공·유통을 종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양축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도축·가공·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문경영체는 양질의 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토록 하기 위하여 '98년도에 가축계열화 사업체 14개소에 242억원을 지원, 축산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계열화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돼지계열화는 18개 업체가 중심이 되어 1,256농가가 참여하고, 육계계열화는 11개 업체에 1,543농가, 산란계계열화는 2개 업체에 50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2개업체가 사업 추진중에 있다.

3. 농림어업의 첨단산업화 및 정보화촉진

가. 농림수산물기술개발사업 추진

(1) 개요

농림수산물분야의 기술은 타분야의 기술과 달리 기후나 토양 등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의 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은 유용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점차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세계는 지금 기술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농림수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통일을 대비한 기초식량의 자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1세기 농림어업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4,650억원(농림기술개발 4,150억원, 수산물기술개발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물기술개발사업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은 영농·영림·영어현장에서 재배, 사양, 양식, 생산기반, 기계, 시설, 유통, 가공, 생활, 환경, 정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와,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특수농업 등을 개발하기 위한 농업인 개발과제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첨단기술개발사업은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수산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 하거나, 이미 타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수산업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의 향상

또는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과제와 품목별 일관기술 연구를 위한 기획연구과제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은 벤처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통한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연구의 주체가 되어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를 '98년에 새로 도입하여 추진중이다.

(2) 과제현황

지금까지 총 1,060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연구수행중인 과제는 총 726건이며, 이중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가 213건, 첨단기술개발과제가 372건, 기획연구과제가 11건, 농업인개발과제가 130건이다.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는 '94년에 204건, '95년에 165건, '96년에 91건, '97년에 56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516건이며, 첨단기술개발과제는 '95년에 처음으로 220건, '96년에 107건, '97년에 76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403건이다.

기획연구과제는 '97년에 처음으로 11건이 선정되었으며 농업인개발과제 또한 '97년에 처음으로 130건이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 기술개발과제 현황 >

구 분	연 구 과 제			
	선정	계속	완료	기타
계	1,060	726	294	40
현장애로기술과제	516	213	276	27
첨 단 기 술 과 제	403	372	18	13
기 획 연 구 과 제	11	11	-	-
농업인개발과제	130	130	-	-

※ '98년도 신규과제는 현재 협약을 체결중에 있음

한편, '97년말까지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294개 과제로 이중 48개 과제는 관련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였고, 140개 과제는 현장적용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06개 과제는 기술이전을 추진중에 있고, 특히는 67과제 168건을 출원하는 등 이들 과제의 연구성과가 조기에 농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중 기업체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 계약을 체결한 우수기술개발과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업체 기술이전과제 내역>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기술이전기업체	기술료징수액
○온라인 컴퓨터 건조제어기 개발	안동대학교	영동농기구제작소	11,335 ^{천원}
○축산분뇨 및 액비처리를 위한 연속발효시스템 개발	(주)과학축산	(주)우진테크	52,740
○고추공동집하 및 자동화 처리시설개발	상주산업대학	신흥기업사	9,000
○장어 통발어선 활어장 냉각 시스템 개발	한국어선협회	청강냉동공업사	기술료감면
○식이버섯 자실체 및 균사체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포천종균배양소	(주)포천버섯개발	기술료감면
○소의 브르셀라 병에 의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연구	전북대학교	(주)한국미생물연구소	32,700
○밀납의 제법과 활용에 관한 연구	농협전문대	마천농협	기술료감면
○솔잎혹파리 방제용 자동수간주사기 개발	임업연구원	남산엔지니어링	22,200

(3) '98 제도개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를 신설하였다.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의 주체가 되어 농림기술개발 목적에 부합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서 신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특히 하이테크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 농업정보화 촉진

현대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고도 정보사회의 등장과 정보지식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농업이 명실공히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하는 새로운 농업경영기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농업부문에 본격적인 정보화시대가 열리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배의사를 결정하고, 원격화상멀티미디어로 영농기술상담을 하며 방에 앉아서 전국도매시장의 시황정보를 보면서 출하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업부문에서의 본격적인 정보화의 추진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의 활력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세계화·개방화로 야기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농업이 타산업 또는 타국의 농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농업정보화 기반의 확충

도시지역에 비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부문의 정보화 기반을 크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농림수산 종합정보망(AFFIS)의 기능과 성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농림관련 기관·단체의 통신망 연결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농촌지역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통신환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의 정보통신 비중이 PC통신 위주에서 인터넷 위주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농림관련 정보의 가이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한마당』의 내용과 기능을 더욱 보강하고 해외의 농림관련 기관·단체까지 연결, 농림한마당을 통하면 모든 농림관련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정보통신이용교육 강화

농업 및 농촌지역에 정보화환경을 조성하고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정보통신이용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98년 13천명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10만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기본과정, 전문과정으로 체계화하여 기본과정은 컴퓨터조작법, 문서작성, PC통신 등 기본적인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하며, 전문과정은 기본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영농S/W 활용방법, 인터넷 활용방법 등을 교육한다.

앞으로는 농촌여성의 농업경영에 대한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3)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기존의 가격위주의 단순정보에서 주요산지별 출하물량·가격 등 시황 정보와 관측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생산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생산자의 출하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채소 오이·풋고추·참외를 대상으로 9개시군 200여 주산단지 작목반, 단협 및 산지공판장을 연결한 『시설채소 생산·유통 종합정보화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으로 시기별·지역별로 생산자 자율에 의한 생산·출하체계가 가능하게 되어 과잉·과소 생산방지 및 유통·소비 안정화를 유도하여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출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현황

대상품목	대 상 지 역
오 이	전남(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경남(진주, 창녕)
풋고추	경남(진주, 밀양, 창녕)
참 외	경북(성주)

제공정보	서 비 스 내 용
생산관리	- 작물재배의향 및 생산계획 - 작목반별 일일 생산·출하내역 등 지역간 생산·출하정보 관리 및 동향 정보
유통정보	- 산지공판장 경락정보 - 공영도매시장 유통정보 등
전문DB	- 품목별 전문 멀티미디어 DB (종묘, 자재, 토양, 기상, 병충해 등)
통신서비스	-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응용한 전자직거래 - 농산물 홍보 -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

*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농산물 물류센터 및 하나로클럽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출하관리 등을 전산화할 수 있는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장별 출하분산과 역류 방지 등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었고, 향후 도매시장·물류센터와 산지 농협·포장센터까지 농산물 EDI시스템 도입을 확산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산물의 재배에서부터 판매·소비까지 유통 전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산지정보에서부터 가격·수출입·소비 등 분야별 DB개발과 이를 연계하는 종합분석시스템 개발을 통해 농업인의 출하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출하전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인터넷상에 농축산물 통합쇼핑몰(Mall of Malls)을 구축·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전자직거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산물유통정보 서비스의 확대

농가의 시장교섭을 강화하고 물류비용 절감등 유통효율의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전망 등 농산물 유통정보 서비스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정보망을 현재 16개시장에서 신설 개장되는 도매시장으로 확대하고, 시설채소 주산단지 작목반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가 정부, 농촌지도기관,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소비자 등을 직접연결, 농산물의 생산, 출하, 유통, 경영 등에 관한 종합정보를 얻고 스스로 영농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5) 원격영농기술 지도시스템 구축 운용

농업인들이 영농기술 상담, 농업정책 문의 등을 위하여 직접 지도소나 정부기관을 찾아갈 필요없이, 화상멀티미디어를 통하여 농사지도 전문가나 정부관계관과 직접 대화하고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영농기술 지도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4.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가. 수출진흥 대책

(1) 국내 수출산업 기반 구축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은 '90년이후 정체상태에서 그동안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경쟁력강화 노력과 적극적인 시장개척활동에 힘입어 '94년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97년에는 1,847백만불로 UR협상이 타결된 '94년에 비해 26% 증가하였다.

정부는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 수출산업의 기반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안정적인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화훼, 과수, 채소류, 돼지고기 등 경쟁력있는 수출전략 품목 위주로 농산물 수출전문 생산단지를 '97년 현재 72개소에서 2004년까지 111개로 확대·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 16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생산유통 지원, 품질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전문 생산단지 확대 조성계획>

품목별	'97년까지	'98	2004까지
채 소 류	7	2	21
과 실 류	19	12	30
화 훼 류	6	2	20
돼 지 고 기	40	-	40
계	72	16	111

또한 돼지고기, 김치, 배, 백합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20대 수출전략품목에 대하여는 농진공, 산림청, 농유공, 한식연 등 9개 기관에 전담연구팀을 설치·운영하여 품질향상 촉진과 생산·유통자금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키위, 호집란, 파프리카 등 수출가능품목도 추가로 발굴하여 생산·유통기반 확충 등 수출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해외 농수산물 시장개척 및 홍보 강화

우리 농산물의 홍보 및 적극적인 시장개척 차원에서 국제식품 박람회('98 : 11회)에 참가함으로써 구매선 확보·신상품 소개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전시·홍보·수출상담 등으로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가고 있다. 특히 신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 개발해 나가기 위해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는 특별기획전, 시식회, 간담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와 병행하여 해외 판촉활동('98. 8회)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박람회 참가 및 수출계약실적>

구 분 \ 년 도	'92	'93	'94	'95	'96	'97
참가횟수(회)	5	10	12	12	15	16
업체 수(개)	88	212	238	288	508	470
수출계약(천\$)	7,975	26,856	76,320	104,121	140,691	164,122

이밖에 동경, 홍콩 등지에는 옥외전광판, 버스외벽, 빌보드광고 등을 통하여 인삼, 김치, 돼지고기 등 주요 수출상품을 소개하고 국제전문지광고 게재(15회), 홍보용 VTR(영,중,일) 제작·배포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전시회도 상시 개최하고 있다.

또한, 동경, 뉴욕 등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설치·운영중인 6개의 해외 농업무역관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현지화적용 상품개발, 주요 전통품목 전시·홍보, 각종 이벤트행사 개최 및 일일사무소 제공, 각종 수출안내 등 수출지원기능을 전담해 나갈 것이다.

<해외농업무역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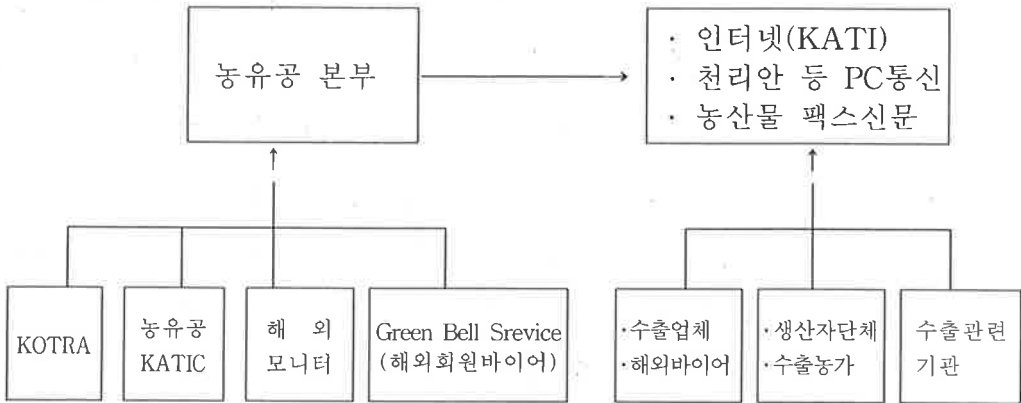
설치년도	'92	'93	'94	'95	'97
지역	화란	뉴욕	오사카	싱가폴,북경	동경

(3)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총력지원체제 구축

'96년부터 기설치 운영중인 『수출애로 상담실』을 '98년에 『농산물 수출 대책 상황실』로 확대 정비하여 생산자, 수출업체가 생산·수출과정에서 겪는 품종선택, 재배, 포장, 가공, 수송 등 현장애로 요인을 분석, 지속적으로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특히 '98년에는 매월 『농산물 무역 확대 대책회의』를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수출동향과 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출 애로요인을 발굴·해소해 나가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에 공로가 많은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농림산물 수출탑』을 시상함과 아울러 자금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전담기관으로 개편하여 정보, 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며, 수출전략품에 대한 『주문정보서비스제도』, 팩스신문(농수산물 수출입 뉴스), Green Bell Service 등을 통해 생산자, 수출업체 및 해외바이어가 원하는 국내·외시장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 정보 신속 수집·전파 체계도 >



아울러, 우수 농수산물 수매·유통 및 시설현대화자금 등을 수출업체 등에 '97년의 1,861억원에서 '98년에는 2,514억원으로 확대·지원하여 자금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 '95.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수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을 50%인하(1%→0.5%등)하고 가격상승위험 보상비율도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수출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4) 수산물 수출진흥대책

수산물 수출은 1차산업중 유일한 흑자산업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수산물 수출시장은 일본, 중국, EU, 미국 등 일부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시장여건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하여

첫째, 수출지원 대책회의 개최로 수출총력체제를 구축하여 국내외 교역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하여 12백만\$의 수출계약을 실현하는 등 새로운 구매선 발굴 및 상품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630여 수산물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산물 수출승인제도 폐지 등 총 6건의 수출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수협중앙회 및 8개 도지회에 환리스크 관리상담실을 설치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환리스크 관리강좌를 개설 운영하였다.

셋째, 적극적인 통상외교로 주요 수출상대국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한·일 수산물교역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의 수출입 규제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대일 생식용 생굴 수출을 실현하여 연간 600만\$의 수출증대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진해만 등 남해안 6개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실시후 원산지증명서 첨부시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여 대일 패류수출에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넷째,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역정보 사이트를 신설하여 교역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수출선도 수협 육성 및 수출계열화 사업을 통해 수출용원자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 전략용 신제품 개발, 국제화 식품지정 육성 등 수출시장 다변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수입관리대책

(1)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UR 농산물협상 결과에 따라 '94.12월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던 242개 품목의 수입을 년차적으로 개방하면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86~'88 평균 수입량 수준의 물량은 계속해서 저율관세로 수입될 수 있도록 품목별로 필요한 물량을 정하였다.

< 수입개방 현황 >

구 분		'95		'96		'97		2001		제 한
총품목수	1,420	166(당년)	1,314(누계)	15	1,359	37	1,396	8	1,404	16
자유화율(%)		94.6		95.7		98.3		98.9		
주요대상품목		보리, 옥수수 등		포도, 사과주스 등		돼지고기, 닭고기 등		생우, 쇠고기		쌀

그리고 이러한 저율관세 물량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품목별 특성에 따라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배정방식을 도입하였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가격등락이 심한 참깨,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오렌지 등 18개 품목 그룹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국영무역 방식), 분유, 밤, 대추 등은 수입권 공매를 실시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입자를 결정하여 수입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이익금과 수입권공매 대금은 전액 환수하여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내농업의 보호와 WTO 협정상 수입의무의 이행을 조화시켜나가고 있다

한편, 농업용원자재와 가공용 농산물 등 국내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은 쿼타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하였다. UR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물량이 '86~'88년 평균 국내소비량과 수입량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의 국내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용 옥수수, 대두, 종돈, 종계 등의 농업용 원자재 11개 품목과 참깨, 맥아 등 가공용 원료농산물 11개 품목에 대하여는 저율관세 물량을 필요한 만큼 확대하여, 국내관련 산업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2) 관련 법상의 각종 제도의 적극 활용

WTO 출범이전에 이미 자유화된 농산물중에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관련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메주, 당면, 표고버섯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였다(표고버섯 : 30%→90%).

또한 WTO 출범과 함께 자유화된 낙화생, 메밀, 녹두, 고구마, 감자 등 60개 품목의 경우는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때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이들 품목중 낙화생, 메밀 등 14개 품목은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에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급증으로 국내축산업에 피해를 입힌 모조분유에 대해서는 산업피해구제조치로서 2001년 2월까지 수입수량조치('97.3~'98.2 수입쿼터 20,521톤) 취하였다. 앞으로도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농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피해구제조도를 활용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3) 원산지표시제 실시 단속 강화

저가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유통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산(180개), 국내산(143개) 및 가공품(81개)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원산지미표시,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수입농산물의 국내유통 질서확립 및 국내산과의 차별화를 기하도록 할 것이다.

(4)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WTO 출범에 따른 검역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1단계('92~'95), 제2단계('96~'97) 검역 강화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외래 병해충 유입방지 및 수입농산물 안전성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검역기능의 지속적 강화를 위하여 '98~2000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3단계 검역기능 강화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5) 수입동향 점검

WTO 체제출범이후 수입자유화되는 품목에 대해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수입동향을 점검하여 수입급증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정관세 부과 및 산업피해구제 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함으로써 개방체제하에서의 적극적인 수입관리로 국내농업 및 관련사업 보호에 보다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6) 수산물 수입관리대책

'97. 7.1이후 수산물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고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환율상승과 국내수요 감소로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현재까지는 수입전면 개방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상태이나,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이 낮아져 수산물 수입이 증가될 것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수산물 수입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수입급증으로 국내 수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고율의 조정관세 부과 및 세율인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내생산이 부족한 양식용 종묘 및 사료용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이나 인하를 통해 기르는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한시적인 수입제한 조치 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구별수협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산업피해구제 지원 모니터링 부서를 활용하여 개방피해에 신속히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불법위장 수입을 방지하고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 건강보호 차원의 수입수산물 검사강화를 위하여 검사장비를 보강하고 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5. 친환경농업육성

최근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국내적으로도 우리 농촌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을 비추어 볼 때 친환경 농업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의 기본적인 국가업무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을 환경과 조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농업의 환경정화 기능을 극대화하고 환경저해 요인을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96년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 중장기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농업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 98년12월 시행을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우리나라 농촌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축산분뇨 발생 및 농약빈병·폐비닐·폐농기계와 같은 폐영농자재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농사중 발생하는 오염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농약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사용량은 1991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1년 27천톤으로 정점을 이룬 후 현재까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모든 농약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에 사람을

중독시키고 농작물과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켜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농약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줄일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농약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벼의 경우 병해충 방제를 80년대 10회 내외에서 현재는 8~9회로 줄였으며, 2004년까지는 3~4회로 줄여 농약사용량을 감축하고, 천적이용 등 병해충 종합방제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독성이 낮은 농약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2)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화학비료는 성분량으로 연간 88만톤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적정시비량 추정치 70만톤보다 18만톤 정도 더 사용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는 잉여비료 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비료 사용량을 2004년까지 40%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토양정밀검정을 실시, 적정량을 시비하도록 지도하여 비료사용량을 줄여나가고, 축산분뇨·부산물 등을 부산물비료로 자원화하며, 완효성 비료를 개발·보급하여 비료사용량 및 유실량을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축산분뇨의 자원화

축산분뇨는 97년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축종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연간 약 46백만톤에 달한다. 축산분뇨처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대상 농가에게는 농림부에서 처리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규제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축산분뇨를 공동수거·정화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97년말 기준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는 총 84천 농가로 89%인 75천 농가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설치농가중 80%는 퇴비화시설, 20%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였다. 축산분뇨는 2010년까지 축산퇴비로 자원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4)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농기계 보유대수는 97년말 현재 3,331천대로서 이중 약 4%인 120천대 정도가 폐농기계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85%를 수거처리하였으며,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중이다. 농기계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폐농기계 발생수량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폐농기계를 수거, 해체, 압착할 수 있도록 폐농기계처리장 설치를 94년부터 지원하여 현재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군에서 “폐농기계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폐농기계처리장에서 수거·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폐농기계 수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폐농기계 일제수집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무단으로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구 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매년 각각 72백만개, 80천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환경부 산하 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유상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실적이 50~65%수준에 그쳐 농촌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4월과 11월중 중점수집기간을 정해 일제수집을 실시하는 등 지속

적인 수집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며, 97.10월부터는 농협을 통하여서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분해가 빨리 되는 비닐을 농촌진흥청과 (주)유공 대덕기술원 공동으로 개발하여 98년부터 농가에 시범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우리나라 토양은 모암자체가 산성인데다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생산력이 떨어지고, 지력은 일본에 비하여 절반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자원의 개량을 위해서 토양개량 제시용, 객토사업 및 농업용수 수질관리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토양개량사업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와 규산을 공급함으로써 농업의 기본인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며, '97년부터는 지원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100%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고, '98년에는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6년1주기로 전농경지가 개량되도록 하고 있다.

(2) 객토사업

사질토 등과 같은 생산성이 낮은 토양과 휴·폐광산 인근의 오염 농경지를 개량하기 위한 객토사업은 '96년까지는 1년 상환의 단기성 농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농업인이 사업을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97년부터는 국고융자(3년)사업으로 전환하여 객토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고 특히, 휴·폐광산 인근의 오염농경지의 개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객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고 있다.

(3) 농업용수 수질관리대책

농업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전국의 61천개의 농업용수원 중에서 97년까지 수질측정망 17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98년에는 200개소, 2000년까지는 534개소로 확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97년에 175개소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5%인 24개소가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환경부와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조사와 시험사업을 실시하여 수질개선대책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용수 수질정보 종합관리 시스템개발 및 수질개선공법연구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질보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환경농업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1)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중산간지의 중소농가들이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면서, 토양과 수질오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토착 미생물생산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등 농가가 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지당 2억 5천만원씩, 총 2,500억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1,000개소의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97년까지 318개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98에는 200억원을 투자하여 80개소를 조성중에 있다.

(2)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지구당 20억원씩, 총 3,780억원을 투자하여 189개소의 환경농업지구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98년에는 100억원을 투자하여 5개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V. 품목별 경쟁력 강화시책

1. 쌀 산업

가. 쌀산업의 여건

최근의 엘니뇨현상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등 많은 국가의 곡물생산이 감소되어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와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도 인구증가, 농업용수 부족, 환경악화 등으로 생산량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세계 곡물 수급사정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최대한의 국내생산능력(Capacity)을 확보하고 부족량에 대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입장이다.

우리의 주곡인 쌀의 경우, 지난 2년간의 연속 풍작으로 세계식량 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17~18%수준(62일분)을 초과하여 안정된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한해만 흉작이 들더라도 수급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쌀의 자급은 매우 중요하다.

나. 중점추진시책

(1)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자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쌀자급을 위해 논면적을 2004년까지 110만ha 확보하고 벼 재배면적은 92만ha를 유지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농지보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94년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농지전용규제완화시책이 농지면적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법령을 개정하여 시설별, 농지전용 허용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위임되어 있던

허가권한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진흥지역내 우량농지는 타용도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전용될 경우에는 대체농지를 지정토록 하는 등 농지보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가용토지가 제약된 우리의 국토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토지수요는 산지나 구릉지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산지를 70%이상 이용 시에는 전용부담금을 전액 감면하는 등의 보완책도 병행하여 추진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농지감소 추세를 더욱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농지보전 차원에서 먼저, 기존농지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 농업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이용 및 경작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농지처분의무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하고 놀리는 땅이 없도록 하는 한편, 산지활용이 더욱 촉진되도록 연초 부터 연구중인 산지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적극 제도화·시책화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우량농지보전을 위해 농지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음식점·숙박시설의 설치를 금지토록 하고, 매년 경지정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하여 대체농지 조성비 단가를 현실화 해 나갈 예정이다.

(2)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대책

2004년까지 5ha이상 규모의 쌀 전업농 6만호와 3~5ha 규모 쌀 전업농 4만호를 육성하여 쌀 재배면적의 46%를 담당케 할 계획이며, 2004년까지 저비용 대형농기계를 보급하여 쌀생산에서 건조에 이르기 까지 일관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품종의 조기보급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소)와 읍·면상당소에 1,577개소의 우량종자 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우량품종을 '97년 34개, '98년에는 38개에서 2004년까지 50개 품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쌀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98년까지 303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 2004년까지 400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전체 쌀 생산량의 40%를 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쌀 유통혁신 및 수매제도 개편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작목반 등과의 계약재배로 품종을 단일화하여 고유브랜드화를 유도하고, 가격차등화로 양질미 생산을 촉진하여 쌀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계열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수매제도도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영농기 이전에 예시하고 희망농가와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농가에 대하여는 일정한 선금을 지급하는 『약정수매제도』를 '9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98년 수매가격과 수매량에 대해서는 연초에 국회동의를 받아 예시하고 수매계획량 770만석에 대해 694천농가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농가에 대하여는 조곡 40kg가마당 2만1천원에 해당하는 7,002억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금년도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로 채택되어 양곡관리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용자수매제는 민간용자업체인 RPC 등과 농가간에 계약에 의해서 매입품종, 물량, 용자단가를 정하고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판매를 한 후에 정산하는 제도로, 용자수매제가 실시되면 민간유통업체에 의한 수확기 농가로부터 흡수물량이 늘어나 민간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단경기 쌀값 상승효과가 농가에 돌아가게 되며, 품질에 따라 가격차별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양질미 생산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입을 검토해 오고 있다.

(4)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직접지불제 실시

고령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이양을 통한 규모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으로서 벼 재배를 3년이상 경작한 농가가 쌀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시,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새로운 직접지불제를 '97. 2.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연령을 6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3년중 1년이상만 벼를 경작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원예산업

가.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주산단지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기계화·시설자동화를 통해 규모화된 전업적 경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배·시설채소·꽃 등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감귤은 생산자 조직을 통한 생산조정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추·마늘·양파 등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자율적 수급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나.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1) 채소

< 노지채소(고랭지채소, 양념채소) >

- 생산자조직을 통한 규모화 및 생산·유통지원

고랭지 채소, 고추, 마늘 등 품목별로 주산단지 조합 및 농업인 중심으로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농가 스스로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가공·

유통사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수급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영농규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이식기, 종합처리장, 공동육묘장 등 주산단지 생산·유통시설을 2004년까지 450개소를 지원하여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유통·가공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기술개발 및 기계화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2004년까지 전작업 기계화가 이루어 지도록 생력기계화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고추 1회 수확품종 등 품종 및 재배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수급 및 가격안정

농가 스스로 자율적 생산·출하조절에 의한 가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수급·가격 예측정보를 전파하고, 각종 자금을 생산자조직에 지원하고 있다.

< 시설체소 >

○ 경영규모 확대 및 생력화

시설면적 5ha 이상의 전문조직을 2004년까지 530개소를 조성하고, 육묘와 재배를 분업화하여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 종합지원체계 구축

농촌진흥청, 농어촌진흥공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술·경영정보를 제공 및 현지순화지도로 시설원예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 시설자재 표준·규격화와 국산화

국내의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원예시설,

자재 전문업체에 대한 농업용 기자재 생산시설 자금으로 '92년부터 매년 3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안정적 수출확대 기반 조성

오이, 가지, 토마토 등 수출가능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단지를 2004년까지 21개소를 조성하고, 일본을 수출전략 시장으로 중점 개척하며 표준규격출하 촉진 및 수출 구매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해외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 과 수

○ 생산·유통·가공·수출 등 종합지원사업 실시

2004년까지 생산유통조직 900개소를 중점 육성하는 등 경쟁력 있는 생산자조직 및 전업농을 육성하고, 작업로 개설, 관배수시설, 토양개량 등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며, 자동관수시설, 고성능방제기 등 노동력 절감기계 및 재배기술 보급으로 노동시간을 감축하여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고 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출하조절, 유통기반시설확충 지원 등 산지유통체계 개선으로 유통효율을 극대화하며, 수출 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기반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 생산·유통지원사업

동일 과종 재배면적이 20ha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생산자조직에 대하여는 산지유통시설등 공동시설을 지원하며,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시설 및 농기계를 지원하는 등 조직경영체 중심의 생산·유통체계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화 획

○ 안정생산기반조성

절화·분화등 품목별 생산조직을 육성하여 생산·출하 등을 자율조정토록 유도하며, 현대화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을 일괄지원하는 화획생산유통단지를 2004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 유통개선

대도시 법정 도매시장(공판장)을 확대 설치하고 양재동 화획공판장 출하량 확대 등 운영을 활성화하며, 규격출하품 포장재 지원 등 규격출하를 확대하고 화획공판장에 유통정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유통정보수집 및 분산체계를 구축한다

○ 수출단지 육성

화획생산·유통 지원단지중 수출유망작목 재배단지 20개소를 2004년까지 수출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출하조절자금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3. 축산업

가. 한우산업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생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2000년대 한우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화,규모화된 경영체를 육성할 목적으로 사육기반시설,축사시설 및 사육장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있다.

'98년에는 지속적인 사육두수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전년도와는 달리 기본축사의 개보수나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508농가 169억원을 지원하고있으며, 99년부터는 종합자금제로

전환하여 농가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일원화시켜 한우산업발전의 내실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낙농산업

(1) 전업농 지원을 강화하고 우량젖소 보급 확대

낙농시장개방에 대응할수 있는 일정수준이상의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시설, 축사 및 사육시설의 자동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 지원 등 낙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사업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농가 1인당 3억원, 법인은 자본금의 200% (축협 등 공공기관은 400%)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IMF이후 소값하락 등의 영향으로 '98년도에는 신규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반면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산유능력검정을 확대하고 국내산 우수 보증종모우 선발로 우량정액보급을 확대하며, 수정란 이식등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98년도에 5,76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우유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확대 유도

우유의 위생·품질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원유가격 산정시 미국·캐나다 수준의 체세포 등급기준을 적용하고, 원유세균수 기준도 최하위 등급을 종전의 ml 당 100만개에서 50만개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다. 양돈산업

(1) 전업농 육성지원

개방화 시대에 선도적 양돈산업을 이끌어갈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 시설, 사육시설·장비등 양돈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사업을 종합지원하고 있으며, '98년에는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전문종돈업 육성 및 우량종돈 보급

'96년부터 원종돈과 종돈을 계열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질병근절을 도모하여 우량종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문종돈업체 6개그룹(42개 GP종돈장 포함)에 대해 2000년까지 833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국내 돼지고기의 브랜드화 등 품질개선 추진

축협, 영농조합법인, 계열화업체를 대상으로 사육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일정규격이상의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확대를 위한 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98년에는 돼지고기 품질개선에 80억원, 규격돈 구매자금 3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 양계산업

(1) 전업농 육성지원과 닭 개량사업의 추진

기술집약적 산업인 양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양계산업의 주축이 될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시설, 축사 등 사육시설·장비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으며, '98년에는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닭 검정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경제능력검정을 활성화하여 농가

에 우량계종 선택지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98년도에 24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계란 가공시설 지원으로 부가가치 제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고 도계시설, 부산물 처리 시설 등을 현대화하며 계란가공시설 지원등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계란가공시설자금을 2개소에 1,18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 축산물 유통개선

(1) 축산식품 관리업무의 일원화

축산물가공식품의 위생관리업무에 있어서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원유의 수집단계는 농림부가, 가공·유통 및 판매단계는 보건복지부가 각각 담당하여 왔으나, 농림부가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등을 관리하고, 보건복지부는 축산물에 들어있는 농약, 항생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제정토록 하고, 최종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와 축산업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 축산물종합처리장을 2000년까지 10개소 설치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낙후된 국내축산물 유통체계를 개선, 선진국 수준으로 육류유통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를 건설목표로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돼지를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고품질 육류를 공급할 계획이다.

1개소당 처리능력은 1일 소 100두, 돼지 1,500~2,000두 규모로서 지금까지 2개소를 완공하였고 7개소는 건설중에 있으며 1개소는 사업취소하였다. 2001년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본격 가동되면 국내 도축물량의 30~40%를 처리할 계획이다.

(3) 육류 도체등급제를 실시하고 식육처리 기술교육을 강화

도축과 소매단계에서의 육질에 따른 차등가격거래제 정착을 위한 육류 도체등급제 실시지역을 '98.7월부터 소는 서울, 6대 광역시 및 129개, 돼지는 13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도체등급제의 성과를 보면 등급별 가격차별화로 쇠고기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고 수출용 규격돈 생산을 유도하여 돼지고기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냉장등급판정으로 인하여 물먹인 소등 부정축산물 유통근절 과 지육경락가격의 등급별 차별화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식육처리 종사자들의 직업의식 고취를 위하여 식육처리 기술분야 국가 기술자격제도를 '96년에 도입하여 식육처리기능사 1,717명을 배출하였으며, 식육처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2,014백만원을 지원하여 '98년에 『식육교육센터』를 건립하였으며, '98년에는 180명을 대상으로 식육처리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바. 사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조사료 생산 지원

(1) 사료첨가제 관리제도 개선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사료첨가제를 동물약품업체를 통하지 않고 사료원료로도 직접 사용할수 있도록 유통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따라서 배합사료제조업체에서는 사료원료로 사용되는 메치오닌, 비타민, 광물질등을 직접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원가절감과 사료의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전 사료첨가제로서 이번에 사료(단미·보조사료)로 분류되는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성분규격과 사용 및 보존방법등을 사료 공정규격에 신설함으로써 새로 분류되는 단미·보조사료의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2) 사료생산기반 조성등 조사료 생산을 적극 지원

신규 초지조성이 어려우므로 기성초지 보완 및 사료작물재배에 중점 지원하고, 영세토지의 분합, 용수원 개발, 목장도로건설 등 조사료 생산성 증진을 위한 생산기반을 개선하며, 특히 IMF이후 조사료 생산확대·이용을 위한 사료작물재배용 종자공급확대, 기계화단지조성 및 볏짚 수거용 기계보급과 볏짚의 암모니아 처리 이용으로 사료 영양가치를 증진시켜 볏짚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사.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농업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추구를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농가 및 단체에 가축분뇨의 액비화·퇴비화 등 자원화시설과 정화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예산 지속 확대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축산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98년에는 총 1,311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보조금은 842억원, 용자금 469억원을 각각 지원할 것이다.

(2) 표준설계도 제작 보급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종류가 다양해 농가의 선택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96년에 축종별·규모별로 가축분뇨 적정처리모델 30개를 설정하였으며, '98년에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7종을 제작, '99년 1~2월중에 보급함으로써 축산분뇨시설의 건설시공과 더불어 축산농가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3) 수분조절제 수급안정 및 축분퇴비 수요 확대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소요되는 수분조절재인 톱밥의 가격상승으로 축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톱밥공급 확대 및 수분조절제 절약형 처리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축분퇴비의 품질향상과 수요확대를 위하여 농·축협에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4)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처리경비 및 기술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축산분뇨의 발생량 기준 설정, 작물별·계절별로 축분퇴비·액비의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 소값안정대책 추진

(1) 소 수매사업 추진

'97년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난으로 환율폭등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과 쇠고기 소비 침체로 산지소값이 큰폭으로 하락하여 '97년에 이어 '98년에도 연초부터 8월말까지 소수매를 계속하였다.

'98년도 수매실적은 112,774두로 수매품대 2,471억원, 제비용에 410억원이 소요되었다

(2) 쇠고기 소비촉진 홍보

쇠고기 소비 촉진을 통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산물 소비 촉진기간('98.5.26-6.12)을 설정하고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정부가 농·소·상·정 협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격 인하와 소비확대를 유도하였다.

주말 직거래 장터, 차량이동판매, 축협, 한냉 주관 할인판촉행사를 개최하여 쇠고기 소비자 가격인하를 유도한 결과 '98년도 9월말까지 쇠고기 총소비량은 252천톤으로 전년대비 8.4%가 감소되었으나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은 197천톤으로 전년대비 14%가 증가되었다.

(3)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

쇠고기 수입개방을 전후하여 소값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한우 번식 농가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적정규모의 한우 번식 기반 유지를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도입을 추진하였다.

축협중앙회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단을 설치하여 '98. 3~6월기간 동안 경기도 안성시, 여주군을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다. '98. 7.16부터 전국 8개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시범사업을 실시하여 99년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98.8.31 소 수매사업

중단에 따른 소값 안정과 한우 송아지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추가로 16개 시군을 선정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한우고기 유통구조의 개선

한우고기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군단위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 브랜드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가 있는 고급브랜드육을 생산할 때 생산농가의 고소득 보장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59개인 브랜드 참여업체를 2001년까지 100개소로 늘리고, 국립농산물검사소의 한우품질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한우고기에 대한 고품질의 상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는 도서벽지를 제외한 전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소매 단계의 등급별 구분판매 지역을 대도시에서 중도시까지 점차 확대하여 한우고기의 고급화를 유도하고, 부분육 유통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과 공판장에 부분육 상장, 경매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식육처리기술센터로 하여금 직업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이들을 식육유통업계의 핵심인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등급별·부위별·축종별 구분판매제도를 조기에 정착하여 2001년도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5) 사료공급기반 확대

생산비 절감과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국내 조사료 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조사료 기반확대를 위해 초지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대리관리자를 알선하며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를 육성하고 국내산 조사료용 옥수수 종자도 생산하여 보급토록 하였다. 쌀 생산의 부산물인 벃짚을 소사육에 활용하기 위해

공동작업단(3-5호)단위로 벚짚 수거장비를 보급하고, 벚짚암모니아 처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축의 능력별, 성장단계별, 사육형태별로 농가에서 적정 영양소를 직접 배합하여 공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업농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자가 배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배합비율등 배합에 필요한 기술을 농가에 직접 지도 보급토록 할 계획이다.

농가의 사료 자가배합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사료공급 기지를 설치하여 저율의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알곡의 효율적인 원료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조사료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능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4. 임업

가. 산지의 자원화

(1) 산림자원의 지속적 육성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호위주 산림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율조장에 의한 임업경영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원가치가 낮은 산림에 대하여 수종개량 조림을 추진하되 경영목적에 따라 자원조성을 차별화하고 조림수종을 다양화('97 : 26수종 → '98 : 48수종) 해 나가고 있으며 2002년까지 78수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용기묘와 직파조림의 시범적 실시와 수종별로 식재본수를 조정(3천본/ha → 1,500~5,000본/ha)하여 지역과 산지특성에 맞는 조림을 실시토록 하였다. '98년도에는 17,785ha 조림계획에 20,383ha를 조림하므로써 115%의 성과 거양하였고, 특히 유실·특용수와 난대림 수종(황칠·후박나무 등)을 3,793ha 조림하였으며, 앞으로도 유망소득수종 조림을 확대하여 산림의 질적 가치를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육림사업은 생산임지 중심의 대단위권역을 설정하여 213천ha를 지역 완결 위주로 실행하고 있으며, 풀베기·덩굴류제거·어린나무가꾸기·간벌사업 등을 통합하여 실시하므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IMF 실업자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98. 5월부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68천ha)을 추진하여 그동안 예산과 노동력 부족으로 육림관리가 미흡했던 우리나라 숲을 체계적으로 가꾸어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업·환경단체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이 발족('98.3.18)되어 숲가꾸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자원화 기반조성

임도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설 및 관리과정에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관보호가 가능한 환경친화적 임도를 시설·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생산임지내 간선임도 위주로 금년까지 13,667km를 시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임도노선을 피해·경관지해 요인이 적은 적정노선 위주로 선정하고, 입지여건에 따라 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예산단비의 200%까지 탄력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써 피해예방에 효과적인 구조물의 확대시공과 새로운 공법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수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임도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보강을 사방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조림·육림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임업의 산업화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임업기계화 기본계획('96~2005)과 제4차산림기본계획('98~2007)에 의하여 임업기계장비 개발·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2005년까지 110천대 보급을 목표로 '97년까지 34천대의 장비를 보급하였으며 '98년중 7천대 보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임업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임업기능인 중장기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임업기능인 영림단을 2010년

까지 1,000개단 12,000명 양성을 목표로 '97년까지 343개단 4,040명을 양성하였으며, '98년중에 38개단 510명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장 기술·경영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강릉임업기계훈련원의 교육시설을 보강하고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현장실습 위주로 임업전문경영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나. 임업경영기반 확충

(1) 사유림경영 활성화

산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독립가와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97 : 763명 → '98 : 863명)하고 있으며, 산림사업에 필요한 보조금과 융자금('97 : 47억→ '98 : 100억)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업의 산업화와 농산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임업경영의 주체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산주로 조직된 협업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협업경영사업 시범단지 5개소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산에서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산림복합경영 성공사례 등을 발굴하여 홍보 팜플렛 등을 제작·보급 하므로써 산림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2) 단기소득임산물 개발·지원

다양한 임산자원의 소득화 촉진과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소득 품목인 밤·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의 산업화를 위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매년 1억\$ 정도를 수출하는 유망품목인 밤의 우수품종 개발, 노령목 갱신, 병해충방제 및 작업로 개설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에 도모하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표고의 생산체제를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의

전환해 나가고, 표고자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신고에 의한 입목 벌채를 5m³에서 50m³으로 확대하고 벌채구역을 지정하는 등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야생화·조경수·분재등 관상자원을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량 자생화 원종을 수집, 대량증식기술 개발보급 및 상품화로 우리꽃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한국 고유 자생화 전시관 및 분재 상설전시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산림내 수목채취 규제완화, 국유림내 분수림설정 허용 등 관련 규제를 대폭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 하였으며, 자금지원 확대 등 산업화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저장·가공·포장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조합 육성·생산자조직 육성·출하조절 및 직거래 자금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임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

식용임산물의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가공산업 육성방안으로 밤슬라이스·밤과자·표고스넥·표고고추장·산채류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국내 수요창출과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산재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목탄·목초액 등의 신기술을 이용한 국산재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과 간벌재를 활용한 톱밥·조사료를 생산·공급하여 환경임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목조주택자재 국산화율 촉진('98 : 18% → 2002 : 30%), 지역특산 목가공품 개발, 목제품질인증제 도입, 수입대체를 위한 폐목재 재활용('98 : 36% → 2002 : 50%)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직매장·집하장 등의 유통시설을 '98년까지 110개소로 확대·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유통체인망 확충, 직거래장터 운영 등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인삼지주목·전선드럼소·낙엽송 집성재 등의 신제품 개발과 대량

수요처 확보 등을 통한 임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로 물류비용 절감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규격출하, 국산재 활용과 유통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유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벌채허가·목재생산량·가격정보 등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98. 6월 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산촌종합개발

산촌은 국토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광범위한 생활공간으로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쾌적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산촌을 휴양림 연계형·농림 복합형으로 추진하여 소득증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살기좋은 마을 개발 그리고 산촌주민을 산림경영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95~2004년까지 150개 마을 개발을 목표로 현재 9개 마을을 개발 완료하였고 16개 마을은 개발중에 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안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주택 신·개축, 산림자원을 이용한 지역특화사업 등이며, 특히 소득과 생활환경의 정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촌지역에 다양한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국유림경영개선

국유림경영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산림녹화기의 기능위주로 되어 있는 관리조직을 책임경영제로 전환하여 국유림경영팀(115팀, 373명)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산림경영시범단지 조성과 선진임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강원 홍천·평창(운두령)에 24,480ha 규모로 새로운 경영모델을 개발하여 한국 미래임업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유림을 확대 집단화 하여 목재자원 확보와 공익기능을 증진시켜 나가고 부실 대부지와 무단점유지의 과감한 정리 등 국유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6) 주민소득과 연계된 산림휴양시설 확충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화·산업화로 산림에 대한 휴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친화적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에게는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주와 산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97까지 : 70개소→'98 : 29개소→2007년까지 139개소)과 산림욕장('97까지 : 28개소→'98 : 10개소→2007년까지 83개소)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운영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신규 조성사업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휴양시설의 내실화 및 휴양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미지 통합사업(C·I)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향토수종 및 주요 희귀식물의 유전자원 보존·증식과 자연학습장 제공 등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수목원은 현재 1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지역별 특색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전시를 통한 산림문화창달과 교육·학술연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림박물관은 광릉산림박물관('87)·공주산림박물관('97) 개관 이후 지역 산림문화발전을 위하여 도별 1개소 건립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조성중에 있는 경남·전북·강원지역 외에 금년도에는 경북지역에 박물관 건립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다.

다. 산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산림지를 둘러싼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을 수용하고 효율적인 산림의 이용·개발을 위하여 보전임지는 임업생산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가급적 보전하고, 새로운 토지이용 수요는 준보전임지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전임지는 공익용·산업용 등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목적사업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전가치가

큰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은 전용을 금지하여 경제·환경 자원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고 있다.

보전임지의 전용을 제한하는 대신 새로운 토지이용 수요는 준보전 임지를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준보전임지 활용시 부담금 감면, 산지 이용 절차간소화 등의 방안을 제도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법령에 반영하는 등 제도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 임업기술 개발·보급

(1) 현장임업기술 개발·보급

경제림조성과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보급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 대립종 밤나무, 고품질다수성 호두나무등 신품종 14종 및 개량종자 13종을 개발·보급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방제용 미생물 살충제 및 저독성 약제를 개발하여 산림병해충 방제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단기 임산물소득 개발을 위하여 야생화의 캔상품화(6종 개발), 오소리 증식(2년1회→1년1회), 송이증산연구, 두릅나무 축성재배법(월1회→월2회 생산) 개발, 솔잎발효차의 제조 및 저장기술(수출효과 65억원/년)을 개발하였고, 또한 간벌 및 가지치기 부산물을 사료화 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등 국산재의 가공기술 개발로 목재 이용도를 증진하였다.

(2) 첨단기술 개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영양 및 약성이 풍부한 산림자원의 고부가 가치 실현을 위하여 생물공학 등 첨단기술을 응용한 산업화 연구에 중점을 두고 『산삼』 등 유용자원의 대량배양을 통한 산업화를 추진하였으며, 항암제

우루시올(URUSHIOL), 숙취해소제, 천연방부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간염백신 등을 생산하는 수종을 육성하여 신물질을 추출·정제하는 등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한 유용신물질 개발에 주력하였다.

또한 액화목재의 생분해성 범용플라스틱 생산(3종), 톱밥을 이용한 버섯균의 증균속 폐수 정화기술개발, 벌채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식 정유추출장치 개발 및 산업화 등 첨단기술을 응용한 산업화 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마. 해외임업협력 증진

(1) 지원협력 강화

자원보유국과 임업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중국·뉴질랜드·호주와 임업협정을 체결하여 제1차 한·중임업위원회(98.6월), 한·호주임업위원회('98.9월), 한·뉴질랜드임업협력회의('98년11월)를 개최하였고, '98.6월에는 개도국 임업공무원(8개국 15명)을 초청하여 산림경영훈련을 실시하는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해외조림 확대를 위한 자원보유국의 수출규제에 대비한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해 진출대상국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사·연구하여 전파하고, 조림사업비 지원을 확대('97 : 58억원→'98 : 82억원)하는 등 해외진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 임산물 수출입

임산물 수출은 일본의 경기침체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농산촌 소득증대·국내가격 안정 도모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밤·송이·표고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하여 원료수매자금으로 용자 361억원, 포장운송비 약 5억원을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등 수출목표 265백만\$('97. 8 : 92백만\$→'98. 8 : 94백만\$)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구미지역 등

에 합관·섬유관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정보조사를 실시하여 수출업체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으며,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소요자금의 30%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하는 등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고 있다.

한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APEC의 임산물 조기자유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수출대상품목에 대하여 일본의 수입관세를 인하(간밤 11.7%→7.5%, 밤통 조립 20.5%→10%, 건표고 13.6%→7.5%)요구 및 대중국 수출합관의 식물검역증 첨부면제 추진 등 수출대상국의 무역장벽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바. 산림행정 규제개혁

'98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행정규제개혁은 산림관계 법령·예규·훈령 등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원점에서 일제 점검하여 개혁대상과제 276건중 220건(80%)을 정비(폐지 138건, 개선 82건)중에 있으며, 훈령·예규는 95개에서 45개로 정비완료 하였다. '99년 이후에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감히 완화·철폐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완화 내용을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전산처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규제완화 내용으로는 사유림 영림 계획의 의무적 작성 자율화, 보전지 3ha미만 분할제한제도 폐지, 입목벌채허가시 조립비용 사전예치 제도 폐지, 작업로·벌채목 운반로 설치 자율화, 대부국유림 매각·교환재산 환매특약제도 폐지, 조립명령 등 일방적 명령제도를 폐지하여 산림사업에 대한 민간부문 진입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조수 인공사육자에 대한 감독 등을 규정하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과 사방사업법, 임업진흥촉진법 등도 개정 추진중에 있다.

5. 수산업

연근해어업

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

연근해어업은 자원에 비해 어선세력이 과다하고 어업인력의 감소, 수산물 수입개방 확대, 어장축소 및 해양오염 심화 등 어려운 여건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4,785억원을 투자하여 연근해어선 3,035척(115천톤)을 감척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94~'97년 기간중에 연근해 업종중 치어혼획률이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과 EEZ 선포시 어장축소 등 직접 영향을 받는 업종, 어업경영 상태가 불량한 업종 등 연근해어선 442척(12,467톤)을 감척하였으며, '98년도에는 339억원을 투자하여 연안어업 3개 업종(해선망, 낭장망, 연안안강망)과 근해어업의 대형선망, 대형트롤, 대형기저, 근해채낚기 등 5개업종에 연근해어선 191척(9,775톤)을 감척하였다

나. 주변수역 자원보호 및 관리강화

UN해양법 발효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의 EEZ선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EEZ수역에서 어업자원을 능동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관한 법률」을 제정, '97.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수역의 어업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자원전문가 협의회 구성과 동북아 자원관리센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97년까지 3,264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123천ha를 시설하였고, '98년에도 558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를 시설중에 있으며, '94년부터 대단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7개소

시설을 목표로 추진하여 '97년까지 2개소를 준공하고 '98년에는 5개소를 공사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어장 자원조성의 가속화와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종묘배양장에서 생산한 수산종묘 34백만 마리를 매입하여 연안어장에 방류하였다

불법어업 근절로 어업질서를 조기 정착하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검찰, 경찰, 해경, 시도, 수협 등 관계부처와 공조체제를 구축, 불법어업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상습·고질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벌금상향조정, 구속수사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불법어선에 대하여 '97년까지 195억원을 지원 1,832척을 합법어업으로 전업 조치하였고, '98년에도 67억원(670여척)을 지원하고 있는 등 불법어업 조절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다. 어로시설의 현대화

'97년에는 연근해어선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조업을 위하여 노후어선, 기관 대체 및 어선장비·설비개량 등에 431억원을 지원하여, 16~21년 이상의 노후어선 35천톤을 대체 건조하고 연료과다소모형 저효율기관 40천마력과 노후된 어선 200척의 장비·설비를 개량하였으며, 어선용 기계 1,824대를 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였다.

해면양식어업

'98년도 해면양식어업은 기르는어업 활성화를 위한 현대식 양식기반 시설확충과 종묘생산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면서, 신품종 및 고소득품종 개발지원으로 어촌계 소득원 향상을 기하고 아울러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하였다.

양식어장 개발을 위해 총사업비 201억원을 투자하여 도서, 벽지 등 저소득 어촌계의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전북, 가리비 등 883ha 어장을 개발하고, 신품종 및 고소득 어패류의 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어패류 종묘배양장 2개소와 어패류양식장 26개소를 지원하는 한편, 양식어장의 현대식 기반구축사업으로 어패류종묘배양장10개소, 사료저장고·제조기 18개, 개량부자 277천개, 내파성가두리양식 3개소 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실어장 방지를 위하여 전 어업권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1회이상 실시, 부실관리 어업권은 관계법규에 의거 정비 조치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기술 보급 및 양식어장의 단위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국 어촌에 상주하고 있는 어촌지도원(272명)을 활용, 적정시설 지도와 어장예찰 강화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양식어장 평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바닥갈이, 오·폐물수거 등 어장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내수면양식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가두리양식장을 육상으로 이설코자 가두리양식장 육상 이전,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 및 담수어장양식 시설과 대단위 담수어장단지 조성을 위하여, '97년에 토산품종 집약생산 시설 22개소(8,100백만원)를 지원하고, 양식시설 기계화 촉진을 위한기자재 등 양식장비는 555대(729백만원)를 지원하여 양식시설 기계화를 촉진하였다

원양어업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주요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 규제 조치로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과 베링공해, 북대서양수산기구(NAFO)수역 등의 주요어장이 상실되고, 입어료 및 어로경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원양정책자금을 '97년에는 3,400억원 지원하였고 '98년에는 4,160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간 어업협정을 통해 양자간 어업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연안국들과는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자원을 보유한 기니아, 세이셸 국가 등과도 새로운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해외어장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어선의 단순입어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 입어대상국 등을 대상으로 현지투자·합작등 상호 호혜적 입어를 적극 추진하여 장기적인 해외어장 및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주요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강화로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는 물론 어업규제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제도 도입에 따른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한 어업에 대하여는 원양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세계개선 등으로 업계 경영비를 줄이며, 새로운 어장의 상업적 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동기를 유발키 위해 신어장개발자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새로운 어장·어법 및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시설을 구비하거나 보강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나가며, 원양어선의 도입, 원양어업 허가 정책 등도 현실성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VI.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시책

1. 다양한 소득원 개발

가.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확대 도모

농촌지역에 농외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높여주고,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1984년부터 농공단지 조성등 농촌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98년 6월말까지 총 295개소의 농공단지를 지정하여 이중 271개소의 농공단지가 조성완료되었고, 조성이 완료된 농공단지에 2,463개의 업체가 입주 가동중이며, 88천명이 취업(현지인 59천명)하여 연간 1조 63억원('96년기준)의 임금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은 고용증대와 생활활동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외에 단지 조성공사와 공장건설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촉진, 지역연고기업의 투자활성화, 서비스업의 발달 등 간접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 농공단지 조성실적 >

구 분	합 계	'93년 까지	'94	'95	'96	'97	'98.6
단 지 수(개소)	295	263	6	7	9	7	3
연 면 적(천평)	13,407	11,984	249	293	389	372	120
입주기업(개소)	3,733	3,599	54	51	28	1	-

나. 농촌휴양자원개발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개발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농원은 '84년, 휴양단지는 '89년, 민박마을은 '9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84년부터 '97년말까지 국고융자 1,355억원을 지원하여 601개소(관광농원 382, 휴양단지 10, 민박마을 209)를 조성하였으며, '98년에는 169억원을 지원하여 59개소를 새로이 조성하고 있다.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의 '97년 한해 동안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관광농원 등에 다녀간 내방객이 565만명(관광농원 495만명, 휴양단지 18만명, 민박마을 52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도·농교류의 매개체로서 역할과 인근지역의 농특산물 판매확대 등 농촌의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다. 어촌휴양단지 개발

어촌휴양단지 개발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존자원의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지역에 국고 융자사업으로 지원하여 어촌지역의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개발하여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 지역개발이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연을 감상하고 생활문화를 체험하면서 어촌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어촌의 자연환경을 관광소재로 한 체험관광 즉 환경친화적 생태관광과 지역사회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어촌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90~'96년도까지 부존자원의 개발효과가 기대되고 사업경영 능력과 자담능력이 있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활어횃집, 숙박시설, 휴게소, 유어선 등 단위사업별로 1억원씩 지원하였다.

'97년도부터는 어촌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시·군, 수협 및 어촌계, 영어법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1억원에

서 30억원으로 증액하여 중규모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2개년사업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어촌휴양단지 사업은 '97년도 사업으로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지역에 신안군이 민자유치하여 총사업비 58억규모의 수산물판매장, 가족호텔, 체험어장 등을 '99년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98년도 사업은 전남 보성군 회천면 읍포지역에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전남 완도군 중도지역 및 경남 거제지역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2000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문화공간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관광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별		목 표	'97까지	'98계획	'99계획	2000~2011
어촌휴양 단지조성	사업량	49	1	2(1)	1(1)	47
	지원액(국고융자)	50,000	750	1,500	750	47,000
어촌민속 전시관건립	사업량	8	-	2	3(2)	5
	지원액(국고보조)	24,000	-	1,000	3,000	20,000

※()는 계속사업(2~3개년) 지역임

라. 한계농지 개발 추진

대형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한계농지를 지역여건을 감안, 다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94.12월 농어촌정비법을 제정. '95. 6월에 시행함으로써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98년도에는 5개소(계속지구포함)를 추진하고 있다.

2. 기초생활환경 개선

가. 현대적 생활환경을 갖춘 문화마을 조성

면 지역의 중심마을에 마을기반시설, 주택신축, 복지·문화 및 환경보전 시설 등을 갖추어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문화마을을 조성해 나가면서 생산기반, 유통, 가공시설사업과도 연계시켜 나갈 계획으로 '91년부터 '97년까지 93개지구를 착수하였으며 '98년에는 823억 원을 들여 12개 지구를 신규로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10년간 4조원 지원

노후되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95년부터 2004년까지 총4조원을 지원하여 매년 25천호씩 25만호를 개량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나, 금년부터 IMF관리체제에 의한 경제위축과 정부예산의 감소로 '98년에는 3,464억원을 지원 21,650동의 개량을 추진중에 있으며, '99년도에도 예산의 감액이 예상되어 당초에 계획된 목표달성을 위하여 별도의 재원확보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주택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총소요액	'95	'96	'97	'98	'99이후
농어촌주택개량	40,000	4,000	4,000	4,000	3,464	24,536
(농특세)	(8,000)	(800)	(800)	(800)	(680)	(4,920)

다. 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정비 추진

지방양여금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제정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94. 7~2004. 6월말까지 10년간 농어촌지역에 투자되는 농어촌특별세 총 15조원중 1조2천억원을 농어촌 도로에 투자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당초 2004년까지 3조 2,210억원(지방양여금 2조630억원, 지방비 1조1,580억원)을 투자키로 되어있는 계획을 상향 조정하여 총 4조 4,210억원을 투자, 17,168km의 농어촌도로를 정비하여 포장률을 '97년말 27%에서 47%까지 신장할 계획이다.

< 농어촌도로 정비계획('94~2004년)>

구 분	합 계	'94~'96	'97	'98	'99~2004
사 업 량 (km)	17,168	3,469	1,280	740	11,679
사 업 비 (억원)	44,210	9,336	4,177	3,437	27,260

※ 재원별(억원) : 농특세 1조 2,000, 양여금 2조 630, 지방비 1조 1,580

라.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

상수원 오염과 수량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주민에게도 도시지역 주민과 같이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94~2004)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계획에서 제외된 면단위 자연마을에 암반 관정을 개발하여 '97년까지 총 2,530억원을 투자하여 1,464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 '98년도에는 680억원을 투자하여 400개소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2004년까지 8,500억원을 투자하여 총 5,000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97년까지 총 1,653억원을 투자하여 2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98년도에는 총581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11개소를 포함하여 47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2004년까지 총 8,000억원을 투자하여 2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사업

농어촌의 생활하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95~'97년까지 606개 마을에 1,238억원을 지원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98년에는 291억원을 지원하여 196개 마을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 및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95~'97년까지 오염소하천 173km를 정비하였으며, '98년에는 172억원을 투입하여 43km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 반대등으로 광역매립지 조성이 곤란한 농어촌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을 연계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95~2004)을 추진하고 있다. '97년까지 1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9개 사업은 공사중에 있으며, '98년에는 신규사업으로 10개소를 추가하는등 앞으로 2004년까지 총 4,080억원을 투자하여 78개 지역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소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배출하는 각종 오·폐수를 BOD 30ppm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8년부터 '97년까지 491억원을 투자하여 88개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98년에는 18억원을 투자하여 3개소를 완료하고, 신규 1개소를 포함하여 2개소의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기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종합대책('96~2005)에 의하여 18개소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상수원 및 하천주변에 밀집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91년부터 '97년까지 2,303억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다. 금년에는 축산농가의 전수조사 등을 토대로 설치 추진중인 45개소중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16개소에 대한 설치사업을 보류하는 등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향후 신규 설치사업은 면밀한 타당성 검토에 입각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특세 생활여건 개선분야 사업내용>

(단위 : 억원)

사업명	소관부처	총 소요액	'94	'95	'96	'97	'98	'99 이후	개발목표
○농어촌도로	행정자치부	12,000	650	1,200	1,200	1,000	840	7,110	○농어촌도로 17,168km 확·포장
○농어촌주택	행정자치부	8,000	400	800	800	800	680	4,520	○농어촌주택 25만호 개량
○농촌생활용수		12,000	400	1,200	1,200	1,200	1,106	6,894	
- 암반지하수	농림부	8,500	130	800	800	800	680	5,290	- 암반관정 5,000개소 개발
- 지방상수도	환경부	3,500	270	400	400	400	426	1,604	- 면지역 215개소 설치
○농어촌하수처리사업		7,000	-	800	750	700	560	4,190	
- 마을하수도정비	행정자치부	-	-	450	413	375	291	-	
- 면단위하수도정비	환경부	5,000	-	150	137	125	97	2,962	- 농어촌마을 2,500개 정비
- 오염소하천정비	행정자치부	2,000	-	200	200	200	172	1,228	- 농어촌소하천 1,000km정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지원	환경부	2,040	-	225	225	225	150	1,215	○78개소(시·군당 1개소)
계		41,040	1,450	4,225	4,175	3,925	3,336	23,929	

※ 면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총예산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포함

3. 교육여건 개선

가. 농어촌학생 대학입학기회 확대

(1)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례입학 확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촌 대책의 일환으로, '96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한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제는 농어민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현상을 방지하는 등 농어촌 육성·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 학생 등의 대학입학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원 외 선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을 '96년 입학정원의 2%에서 '97학년도부터 3%로 확대하였고, 대상 범위를 농어촌 소재 고교졸업생은 물론 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특별전형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여 농어민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였다.

- '96 : 총 265개 대학 8,967명 입학
- '97 : 총 300개 대학 14,127명 입학
- '98 : 총 313개 대학 16,017명 입학
- '99 : 총 321개 대학 17,700명 선발예정

(2) 농어촌지역에 전문대학 설립

농어촌지역의 전문대학 설립요구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고교를 개편, 8개 공립전문대학을 설립하기로 하여, 거창·남해 전문대학은 '96년에, 예천전문대학은 '97년에, 강원전문대·옥천전문대·청양전문대·담양전문대학을 '98년에 개교하였고, 장흥전문대학(장흥지역)은 '99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나. 농어업인 자녀교육비 부담경감

(1) 공립학교 수업료, 입학금 면제범위 확대

농어촌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94. 8월 교육부령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읍·면, 도서·벽지 소재 공립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범위를 15%에서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영세농어가 자녀학자금 지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농어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부모가 읍·면지역 및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 1ha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중 실업계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4.28)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103천명을 대상으로 66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3)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핵심 농업인후계세대 육성, 자영농과생의 기숙사생활을 통한 협동 의식 및 영농의욕 고취, 농업인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지원계획을 확정('85.2.21)하여 '86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2,051명에게 1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4) 새마을장학금 지원

농업계고교 재학생중 자영농과생 전원과 일반농과생중 영농학생이나 4-H회원을 우선 선발,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3,000명에게 4억8천만원(1인당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98년도 농어업인 자녀교육비 지원계획 >

구 분	실업고생 학자금	자영농과생 급식비	새마을장학금
인 원	103천명	2,051명	3,000명
금 액	663억원	13억원	4억8천만원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기존의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과 병행하여 '94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 2,10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학기당 100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융자금의 상환은 졸업 또는 수료 후 1년이 경과된 다음달부터 융자받은 기간의 2배기간 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등상환 하도록 하고, '98년에는 2만 명에 대하여 2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라. 농어촌 출신 학생 기숙사 건립

문화관광부에서는 농어촌출신 도시유학생 숙식비 절감, 면학분위기 조성 과 농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지방도 시지역에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위한 기숙사를 '95년부터 2000년까지 9 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건립규모는 연건평 2,000평 규모로 3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관, 편의시설(도서실, 식당 등), 체육시설(체력단련실, 농구장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출신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할 계획이다.

'98년도까지 경북, 경남은 개원운영중에 있고,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4개소는 건립중에 있으며 '99년이후 3개소(경기, 강원, 제주)를 추진 할 계획이다.

마.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농어촌주민의 문화이용공간 확충 및 건전여가 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 940억원을 투자, 100관의 공공도서관을 농어촌지역에 건립하고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98년에는 7개 도서관에 건립비를 각 7억1천4백만원씩 50억원을 지원하고, 도서 구입비로 166관에 10억원을 지원하였다.

4. 농어업인 연금제도 실시

가.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과 WTO체제출범 및 UR 등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통상압력 강화 등으로 농업인의 노후 생계보장과 노령 농업인 등의 은퇴후 소득보장제도로써 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내에 국민연금을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94. 6월 농어업인연금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95. 7. 1일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다.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시행 성과

농어업인연금제는 '95년 7월에 전국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자를 대상으로 확대실시하였으며, '97년말 현재 가입자수는 1,607천명(농어민 995, 비농어민 612)으로 정착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농어업인연금제도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부과, 급여체계를 적용하되,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95년 시행당시 60세이상 65세미만의 고령 농어업인에게 한시적으로 가입기회를 부여하여 83천명이 가입하였다.

또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에 해당하는 2,200원을 매월 지급하고, 관리운영비 전액을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2004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다.

<농어업인연금 지원계획>

(단위 : 억원)

총소요액	'94	'95	'96	'97	'98	'99~2000
8,000	10	455	598	653	616	5,668

한편 효도연금보내기 운동을 사회운동 차원으로 적극 전개하여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농촌에 계신 부모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토록 유도함으로써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모봉양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다.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농어업인 연금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자진납부 등의 연금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므로 특례노령 등에 대한 연금급여 혜택, 유족·장해연금등의 연금수급사례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연금보험료의 자동이체제도, 선납제도, 분기납제도등의 납부편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월 납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중이다.

5. 의료여건 개선

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1)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어민의 부담 경감

소득형태, 소득과약률, 의료이용률이 유사한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던 의료보험제도는 조합내에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원활한 재원조달, 조합별 책임경영 및 조합간 경쟁에 의한 효율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으나 조합간 연령별 인구구성, 조합간 재정력 격차 발생, 일부 소규모 조합의 경우 위험분산 기능이나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미흡하여 관리운영비 비중이 높고 퇴직, 거주지이전 등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경우 조합간 자격관리가 연계되지 않아 누락자 및 이중자격자가 생기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96. 11월 국무총리 산하에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또한 227개의 지역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공포('97.12.31)되어 '98. 10. 1부터 시행되었다.

국민의료보험법에서는 조합별로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지역 단일보험료 부과체제로 변경하여 고소득층이 더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덜 부담하도록 하였다. 특히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산정된 보험료의 15%를 경감하였고, 도서·벽지 지역주민에게는 보험료의 50%를, 노인단독세대·모자세대·소년소녀가장세대·장애인세대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30%를 경감토록 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98년 농어촌조합은 지역주민 1인당 매월 2,630원씩 지원하는 이외에 국고차등지원 1,182억원, 노인의료비 682억원, 고액진료비 440억원

등 총 4,072억원(농어촌 조합당 44억원, 1인당 9,411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규모는 농어촌조합 총 소요재정의 약 60%에 해당한다.

(2) 국고차등지원 비율의 연차적 확대

도시와 농어촌지역 조합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국고지원 방식을 시·군별 소득수준과 인구비율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국고차등지원제도를 실시하여 '94년 국고지원 총액의 3.3%에서 '95년 10%, '96년 18%, '97년에는 20%, '98년에는 25%까지 확대실시하고 있다.

(3) 노인의료비 공동부담사업 실시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65세이상 노인의 입원급여비 전액을 직장조합, 공·교조합등 모든 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부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촌조합에 대한 지원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97년 하반기부터 대상을 60세이상으로 확대하였다.

(4)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 확대 실시

모든 조합이 공동부담하는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의 규모를 현행 건당 120만원이상에서 '97하반기부터 100만원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노인 및 고액의료비 공동부담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조합의 부담률 상한을 '96년부터는 보험료 수입의 20%에서 25%로 인상하여 실시한 바 있다.

(5) 건강진단 실시 및 급여기간 연장

농업인 등의 의료비 부담경감 및 보험급여 확대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40세이상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95년부터 당뇨, 고혈압, 간기능장애 등 성인병에 대해서 격년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보험급여기간을 '97년 270일에서 '98년에 300일로 연장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30일씩 연장하여 2000년에는 급여기간 제한없이 연중 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여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농어촌도·농복합형시를 포함한 군단위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및 산하 읍·면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진료기능 보강을 위한 진료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료서비스 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94 ~ '97	'98	'99~2004
소 계	5,789	2,568	572	2,649
○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4,449	1,428	372	2,649
○ 민간의료기관 금융지원	1,340	1,140	200	미정

(2)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산간오지·벽지 등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의 진료기능강화 및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물리치료실 설치 확대 및 공중보건 한의사제도 도입

전국 245개 보건소중 '97년말 현재 199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였으며, 도·농복합형 시를 포함한 농어촌지역의 보건소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2000년까지는 전 보건소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중보건한의사 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한방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7년에 농어촌지역 보건소 48개소에 대한 한방진료실 증·개축을 완료하고, '98년에는 공중보건 한의사 10명을 배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6. 귀농인력 증가 및 귀농대책

가. 귀농가구 동향

최근 2~3년전부터 경기침체 등으로 실업이 늘어나면서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농업도 자기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귀농 가구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998년 1월~10월중 귀농가구 조사결과 5,541가구가 귀농하여 IMF사태이후 급속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귀농현상은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최근 국가적 과제인 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귀농농가는 젊은계층 위주(30~40대 86%)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인력 구조개선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연도별 귀농가구 현황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10월까지)
귀농가구수	371	299	413	618	662	922	2,060	1,841	5,541
누계	371	670	1,083	1,701	2,363	3,285	5,345	7,186	12,727
구성비(%)	2.9	2.3	3.2	4.9	5.2	7.3	16.2	14.5	43.5

- 귀농연령 : 30대 52, 40대 25, 50대 16, 60대이상 7%
- 귀농전직업 : 회사원 40, 자영업 26, 노무자 24, 공무원 3%
- 주영농분야 : 경종 54, 축산 13, 원예 12, 과수 10%

나.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대책

IMF한파로 기존농업인도 영농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영농경험, 영농기반이 없이 귀농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한 가능한 젊고 능력있는 인력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해 먼저, 정확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위해 농림부와 농촌지도소에 귀농상담실(전국 162개소)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림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농촌생활, 주택, 농지구입,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의 시·군 농촌지도소를 통하여 품목선택, 기술·경영지도, 선도농가견학 및 실습알선 등을 지도·상담해 주고 있다.

둘째로 귀농인의 영농기술 습득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각 시·도 지도기관 및 농협, 귀농운동본부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영농기초지식, 소양교육등 귀농교육을 대폭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귀농후에는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품목별 전문기술교육등 130여개 과정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귀농자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00억원의 재원(예비비 200, 농업경영자금 200억원)을 확보하여 귀농자 영농정착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있다. 본 특별지원 자금은 귀농교육을 이수하고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긴 55세이하의 귀농자에 대하여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을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귀농자로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년리 6.5%, 2년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융자지원하고 있다.

귀농창업자금 지원실적

('98.10.31현재)

계 획(A)		실 적(B)		비 율(B/A)	
인 원	예 산	인 원	자금집행	인 원	자금집행
2,000명	400억원	1,824명	309억원	91.2%	77.3%

아울러 귀농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군에 『귀농인력 영농정착 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귀농자 개인별로 전담지도사 배치등 관리지도 를 강화하고 있다.

7. 귀어인력 증가 및 귀어 대책

가. 배 경

최근의 경제난으로 도시로부터 귀어(歸漁)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은 어업기술과 경험, 자본력 등의 부족으로 어촌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산업은 양식어업 면허, 어선어업 허가 등 제도적인 제한과 함께 기득권을 가진 일선 어촌의 틈새진입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귀어가들이 하루빨리 어촌생활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술 상담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어촌정착에 필요한 창업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귀어가 현황

'93년 이후 귀어가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98. 10월 현재까지 귀어가구는 총 1,282가구로서 30~40대인 청·장년층이 중심(75.2%)을 이루고 있고, 귀어전 직업은 주로 회사원(봉급생활자)(51.8%)이며, 소득감소(45.4%)가 귀어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귀어 현황 >

(단위 : 가구)

합계	'93	'94	'95	'96	'97	'98.10
1,282	122	172	221	216	282	269

< 지역별 귀어 현황 >

(단위 : 가구)

합 계	전남	경남	강원	경북	충남	인천	제주	부산	울산	전북	경기
1,282	693	198	113	104	49	31	35	18	18	12	11

다. 귀어가 영어(營漁)정착지원

(1) 귀어상담실 설치 및 영어기술상담·교육

전국어촌지도소를 비롯하여 연안 시·군과 일선수협에 귀어상담실을 설치(총 223개소)하여 귀어가 지원내용, 수산기술상담 등을 통해 어촌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어가의 대부분이 어업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방청별로 기초영어기술과 현장체험 등을 통한 어업에 대한 기술을 사전에 습득하도록 교육훈련과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어촌정착 및 육성자금 지원

'98년 귀어가 어촌정착자금 20억원을 확보하여 100명을 선정, 1인당 최고 2,000만원을 한도로 개인별 영어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98년도 귀어 어촌정착지원자금의 지원대상자는 '97년이후 어촌지역으로 귀어한 자로서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등 수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55세 미만인 자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 연도별 지원계획 >

구 분	합 계	'98	'99
○ 인 원(명)	200	100	100
○ 사업비(백만원)	4,000	2,000	2,000

그리고 이미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어가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수협을 통해 영어자금 5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자금이 부족시에는 5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업자금 대부제도(1인당 3,000만원)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귀어가 개개인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98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1998년 12월 일 인쇄
1998년 12월 일 발행

발행 : 대한민국정부
편집 : 농림부 농업정책과
인쇄 :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 비 매 품 >